

# 노동패널자료 연구(Ⅲ)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홍민기 · 최형재 · 강신욱 · 김현경 · 윤명수





## 목 차

요 약 .....	i
-----------	---

### 제1장 사적 이전 및 증여 :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	(홍민기) 1
제1절 서 론 .....	1
제2절 소득 구분과 설문의 차이 .....	2
제3절 이전소득과 상속증여 통계의 비교 .....	6
제4절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의 비교 .....	9
제5절 결 론 .....	14

### 제2장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초과근로수당의 특징

.....	(최형재) 17
제1절 서 론 .....	17
제2절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의 조사 방법 및 한계점 .....	19
1.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조사 .....	19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조사 .....	22
제3절 초과근로수당의 특징 .....	23
1. 분석 기간 및 방법 .....	23
2. 초과근로 수행자의 비중 .....	24
3. 초과근로 참여자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비중 .....	30
4. 초과근로시간 .....	32
5. 초과근로수당 추이 .....	33
6.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분포 .....	36

제4절 결 론 .....	38
---------------	----

### 제3장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 분석 : 한국복지패널

자료와의 비교 .....	(강신욱) 42
제1절 서 론 .....	42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	43
1. 자 료 .....	43
2. 소득의 단위 및 범위 .....	44
3. 자료의 결합 및 가중치 .....	45
제3절 주요 빈곤지표 .....	46
1. 정태적 빈곤지표 .....	46
2. 동태적 빈곤지표 .....	47
제4절 빈곤의 정태적 특성 비교 .....	48
1. 빈곤선 .....	48
2. 빈곤율 .....	50
3. 연령대별 빈곤율 .....	51
4.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 .....	54
제5절 빈곤의 동태적 특성 비교 .....	57
1. 빈곤의 진입률과 탈출률 비교 .....	57
2. 빈곤경험 유형 비교 .....	58
제6절 결 론 .....	61

### 제4장 개인과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 분석

.....	(김현경) 62
-------	----------

제1절 서 론 .....	62
제2절 노동시장 불안정성 관련 변수 비교 .....	63
1. 한국복지패널 .....	63
2. 한국노동패널 .....	64

제3절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	65
제4절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	71
제5절 결론: 노동패널에 대한 함의 .....	78

## 제5장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본 건강상태 : 체질량 지수를

중심으로 .....	(윤명수) .....	80
------------	-------------	----

제1절 비만과 체질량지수 .....	80
제2절 인체치수조사자료와의 비교 .....	81
1. 전체 자료 .....	83
2. 공통된 연령으로 제약된 자료 .....	84
3. 연령별 성별 비교 .....	86
제3절 맺음말 .....	90

참고문헌 .....	96
------------	----

## 표 목 차

<표 1- 1>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소득 조사의 비교 .....	2
<표 1- 2>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 조사 항목 비교 .....	3
<표 1- 3>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의 정의 .....	4
<표 1- 4> 자료별 이전소득과 상속증여 총액(2015년) .....	6
<표 1- 5> 노동패널자료와 국세통계의 구간별 상속증여액과 인원 비교(2015년) .....	7
<표 1- 6>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구간별 상속증여액과 인원 비교(2015년) .....	8
<표 1- 7>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2015년) .....	10
<표 1- 8>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2015년) .....	13
<표 2- 1>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할증률 분포, 2009~15년) .....	37
<표 3- 1> 두 데이터의 연도별 빈곤선 비교 .....	49
<표 3- 2> 빈곤선 수준별, 자료별 빈곤율 비교 .....	50
<표 3- 3> 빈곤선 수준별, 자료별 빈곤율 비교 .....	59
<표 4- 1> 경제활동상태 분포 .....	66
<표 4-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분포(복지패널) .....	67
<표 4- 3>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분포(노동패널) .....	67
<표 4- 4> 종사상 지위별 1년간 일한 개월 수(복지패널) .....	68
<표 4- 5> 종사상 지위별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복지패널) .....	68
<표 4- 6>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복지패널) .....	69
<표 4- 7> 종사상 지위별 주당 근로시간(노동패널) .....	70

<표 4- 8>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노동패널) .....	71
<표 4- 9> 종사상 지위별 가구주 소득분포 .....	73
<표 4-10> 전체 취업가구주 대비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포 .....	74
<표 4-11>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1년간 일한 개월 수(복지패널) .....	74
<표 4-12>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복지패널) .....	75
<표 4-13>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연간 근로시간 (복지패널) .....	75
<표 4-14>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주 평균 근로시간 (노동패널) .....	76
<표 4-15>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근로시간 비율 .....	77
<표 5- 1> 기술통계: 전체 자료 .....	83
<표 5- 2> 기술통계: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 .....	85
<표 5- 3> 기술통계: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 .....	85
<표 5- 4>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14~19세) .....	87
<표 5- 5>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20~29세) .....	87
<표 5- 6>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30~39세) .....	88
<표 5- 7>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40~49세) .....	88
<표 5- 8>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50~59세) .....	89
<표 5- 9>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비교 (60~69세) .....	89

## 그림목차

[그림 1- 1] 연령별 사적 이전수입(2015년) .....	10
[그림 1- 2]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2015년) .....	11
[그림 1- 3]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 (2015년) .....	14
[그림 2- 1]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	25
[그림 2- 2]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성별) .....	26
[그림 2- 3]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	28
[그림 2- 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	29
[그림 2- 5] 초과근로 수행자 중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의 비중 .....	31
[그림 2- 6]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	32
[그림 2- 7]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	34
[그림 2- 8]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	35
[그림 3- 1] 두 데이터의 연도별 빈곤선 비교 .....	49
[그림 3- 2] 빈곤선 수준별 빈곤율 비교 .....	51
[그림 3- 3] 아동(만 18세 미만) 빈곤율 비교 .....	53
[그림 3- 4] 근로연령대(18~64세) 빈곤율 비교 .....	53
[그림 3- 5]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비교 .....	54
[그림 3- 6] 빈곤선 수준별 빈곤격차비율 비교 .....	55
[그림 3- 7] 빈곤선 수준별 소득격차비율 비교 .....	56
[그림 3- 8] 소득구간별 인구비율 .....	56
[그림 3- 9]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비교 .....	57
[그림 3-10] 2011~15년간 빈곤경험 및 회수 분포 .....	59
[그림 3-11] 2011~15년간 빈곤경험 유형 비교 .....	60



## 요 약

### 1. 사적 이전 및 증여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 및 증여를 조사하는 방식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에서 1개의 설문문항만 있어서 간략하게 묻고 있는 반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주 부모, 배우자 부모, 따로 사는 자녀, 그 외 친척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을 각각 따로 묻고 있다.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 모두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속증여액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고소득 가구 표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패널자료에는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넘는 가구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표본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소득의 양상은 역U자형을 보여,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40~50대 중장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지출도 마찬가지로 역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사적 이전지출이 적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을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수입은 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

득이 적을 것이다. 노동패널의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소득 양상은 역U자형이다. 이로부터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일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기와 장년기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에서의 조사결과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지출이 사적 이전수입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패널자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중장년기에도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여서 이러한 예상과 다른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년 전 소득을 회고하여 답해야 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매월마다 가계부에 적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측정오차에 관해서는 가계동향조사가 노동패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에서 매우 자세하게 묻고 가계동향조사에서 1개의 설문으로 간단하게 묻고 있다. 이전소득의 총량을 묻는 가계동향조사보다는 자녀, 부모, 친척을 구분하여 묻고 현금과 현물을 또 구분하여 묻고 있는 노동패널에서 측정오차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방식과 설문문항을 보면 두 조사의 장단점이 엇갈려서, 어떤 조사가 이전소득에 대해 측정오차가 적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두 조사가 조사방식과 설문 문항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 총액 조사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적 이전 총액에 대해서는 조사방식이나 설문방식 차이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및 지출 양상에 대해서는 두 조사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 40대에도 이전소득 수입이 20대나 70대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40대에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평균적으로 많은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결과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총량만을 묻고 있는 방식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 2.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초과근로수당의 특징

초과근로수당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의 특징과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초과근로 및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장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내용은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율,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의 수준 및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등이다.

먼저, 초과근로 참여자의 규모를 보면,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약 28~2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참여 비율은 특히 성별로는 남성,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0%가량은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 설문조사 방식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과근로 참여자들은 월평균 4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통계는 전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월 단위로 응답한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 초

과근로 참여자들이 법정수준 이하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 통상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12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초과근로수당 수급자는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56% 정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에는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초과근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초과근로 관련 조사 항목 및 조사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초과근로 여부,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등 서로 일관되게 응답되어야 할 항목들을 조사할 때 응답의 일관성을 중첩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할 때는 초과근로수당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조사할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항목들에 대한 수치 보고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중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사유 중 포괄임금제 실시로 인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별도의 설문 항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시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모두)

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은 ‘실근로시간’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개인별 조사 지침에서 근로시간에 대해 지불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넷째,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즉 할증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응답 항목이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이 다분히 주관적인 응답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수당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하여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파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3.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 분석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 9~19차 자료와 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5~15년 사이의 빈곤 관련 지표가 두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빈곤선의 변화 추이나 빈곤율의 변화 추이 면에서는 두 자료 상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노동패널의 빈곤선 수준이 복지패널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에는 노동패널의 빈곤지표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 2011년을 기점으로 반대로 복지패널의 빈곤지표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복지패널의 표본 추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복지패널의 표본추가 시 저소득층 표본이 집중적으로 보완되면서 이것이 빈곤지표의 변화 추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노인빈곤층 표본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패널의 빈곤층은 복지패널에 비해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패널의 빈곤층은 복지패널의 빈곤층에 비해 빈곤 경험 횟수가 적고 지속빈곤이나 만성빈곤층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노동패널에서 노인빈곤율이 낮다는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개인과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노동패널은 패널조사라는 특징을 살려서 지난 조사 당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8개의 유형(임금근로 여부×지난 조사시점 계속근로여부×취업상태)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질문한다. 이 연구에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조사 문항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일자리 시작시점에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난 한 해의 근로개월 수이다.

노동패널은 조사하는 현재 시점의 근로상태에 대해 질문하는데,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 현재 직장이나 사업 시작시점을 질문하므로 이를 통해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와 간접적으로 지난해 근로개월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현재 비취업상태인 경우 마지막 직장이나 사업의 시작 및 종료시점은 직업력에만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지 않으면 현재 비취업자의 최근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 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있고, 복지패널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 유무에 따라 정규와 초과근로시간의 합, 또는 평균 근로시간으로 응답하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주 단위 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 주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반면, 복지패널은 모든 질문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가구용과 가구원용 모두에서 가구원 개인의 종사

상 지위에 대한 질문이 있다. 지난해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한 날 근로시간(불규칙적인 일자리) 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규칙적인 일자리)에 대한 설문은 가구원용 개인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15~64세 모든 개인과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 지난해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주 평균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복지패널에서 일의 규칙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답하는 근로개월 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 그리고 이로부터 구한 연간 근로시간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패널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에게 주 평균 근로시간과 주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고 있으나, 중복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가 불규칙한 경우의 근무행태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일자리가 불규칙적인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패널의 문항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근로개월 수 또한 노동패널에서 구할 수는 있으나 직업력을 결합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정보를 얻기 쉽도록 회고적 방식의 질문을 제안한다.

복지패널이 이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갖춘 이유는 조사의 특성상 주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하는 까닭이다. 근로연령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안정되지 못한 일자리를 갖기 쉽고, 일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패널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소홀할 수 없고,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5.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본 건강상태

본 연구는 키, 몸무게 등 한국노동패널에 있는 신체지표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비만과 관련된 체질량지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얻기 위해 행하는 인체치수조사가 실측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인체치수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응답오차가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특히 두 자료가 공히 지지하는 연령대로 샘플을 제약한 후 비교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근접한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에 동시에 조사된 연령대로 제약을 했지만, 키, 몸무게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체질량지수나 비만율은 두 개의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인체치수자료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있지만, 비만율로 따지면 상당히 낮다. 가장 큰 차이는 평균연령인데, 이는 연령대는 같더라도 두 개의 조사가 상당히 다른 연령분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령분포는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 등의 신체지표의 통계가 양 자료에서 다른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동일한 해에 조사된 두 개의 자료도 아니니 쉽게 한국노동패널의 응답오차가 크다 적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가장 확실하게 응답오차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응답자의 신체지표 관련 답변을 얻은 후 실측을 통해 그 괴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나아가 응답자를 전원의 신체지표를 실측한다면 응답오차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실측은 비용 및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응답오차의 편향성이 맞는지 좀 더 연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한국노동패널에 보고된 신체지표가 어느 정도의 응답오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제 1 장

사적 이전 및 증여 :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의 비교

##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 및 증여를 조사하는 방식과 조사결과에 대해 비교한다. 두 조사는 모두 가계조사이고 소득을 가구단위로 묻고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1년에 한 번 조사하면서 소득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묻고 있다. 사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적 이전소득을 묻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매월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면접조사와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 취업상황, 주거 등 가구 실태는 면접 조사를 통해 조사원이 기입하도록 한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계부(종이가계부 혹은 전자가계부)를 가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패널자료에는 1년간 소득값이 있고, 가계동향조사에는 월별 평균 소득값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별 소득값에 12를 곱하여 연간 소득값을 비교한다. 조사 방식과 공표 방식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제2절 소득 구분과 설문문의 차이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을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두

〈표 1-1〉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소득 조사의 비교

소득구분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임금	임금
사업소득		자영업자 소득 (세후)	사업소득(세후) 주택 등 임대소득 의제자가주거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주식매매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	사회보험수혜금, 기초생보 지원금 정부보조금(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사회단체 보조금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사적 이전	<b>따로 사는 부모님 도움</b> <b>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b> <b>그 외 친척 보조금</b>	<b>가구간이전</b>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상속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금 재해보상금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저축·보험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 수입 빌린 돈 <b>자산이전수입</b>

주: ‘의제 자가주거소득’은 무상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자식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의제 이자소득’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의 이자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을 말함.

조사가 같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조사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분류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 등 임대소득이다. 주택 임대소득을 노동패널에서는 재산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패널에서 주식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조사되고 있고, 부동산매매차익은 부동산소득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매각금액이 조사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소득은 크게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가리키고, 사적 이전소득은 부모, 자녀, 친지, 친구 등 개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가리킨다.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 노동패널에서는 사회보험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정부보조금(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공적 이전소득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을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하여 묻고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세금환급금을 묻고 있는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관련 항목이 없다.

〈표 1-2〉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 조사 항목 비교

항 목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이전소득 수입	가구주 부모로부터 현금과 현물 배우자 부모로부터 현금과 현물 따로 사는 자녀에게 받은 현금과 현물 그 외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구간 이전 (이전소득)
상속증여 수입	상속 및 증여액	자산 이전수입 (기타수입)
이전소득 지출	가구주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 배우자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현금과 현물	가구간 이전지출 (비소비지출)
증여지출		자산 이전(기타지출)

사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묻고 있고, 노동패널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묻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전소득 수입에 대해서는 가구간 이전소득과 자산이전수입 두 가지 항목의 설문이 있다. 가구간 이전소득은 이전소득에서 묻고 있고, 자산이전수입은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간 이전’을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의 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산이전수입’은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산이전수입’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 가구간 이전과 증여는 타 가구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가구간 이전과 증여로 구분한다. 기준이 되는 금액의 크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증여를 자산이전수입의 한 예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비교적 큰 금액을 이전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상속을 포함하는 용어로 증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사적 이전소득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현물 포함)”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노동패널에서는 이전소득 각 항목에 대해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소득에 대해 묻고 있다.

〈표 1-3〉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의 정의

항 목	정의
가구간이전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
자산이전수입	자산을 타 가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
가구간 이전지출	가구간 이전하는 현금지출 (국내학생가구 송금,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기타송금(국외))
자산이전지출	자산을 국내거주하는 타가구에 분배하거나,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 등에 기부한 경우

“다음은 가구주의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상속을 제외한 경제적 교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가전제품 등을 받으시거나 드린 경우도 이를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 주십시오.)”

**나1-5** 작년 한해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경제적 도움은 얼마나 되십니까?

	■ 현금 _____ 만원	■ 현물 _____ 만원
	현금 _____ 만원	현물 _____ 만원
변수명	H**1118	H**1119
해당차수	<div>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div>	

노동패널에서 ‘증여상속’은 기타소득에서 묻고 있다. 노동패널에서 기타소득이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 대금 등과 같이 위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속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소득들은 일시적으로 번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패널에서는 이전소득을 매우 상세하게 묻고 있다. 이전소득 수입에 대한 설문 항목은 (1) 가구주 부모로부터의 현금, 현물, (2)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현금, 현물, (3) 따로 사는 자녀에게 받은 현금, 현물, (4) 그 외 친척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이전소득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소득 지출에 대해서 노동패널에서는, 이전소득 수입과 마찬가지로, (1) 가구주 부모에게 준 현금, 현물, (2) 배우자 부모에게 준 현금, 현물, (3)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설문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증여지출에 대해 별도의 설문 항목이 없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자산이전 항목이 기타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자산이전지출에 대해 “자산을 국내 거주하는 타가구에게 분배하거나,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 등에 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이전지출이 부모나 자녀에게 주는 증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단체나 정부에 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세대간 증여보다 포괄 범위가 넓다.

노동패널에서는 소비 항목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을 묻고 있다. 같이 사는 가구원에 대한 지출을 증여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절 이전소득과 상속증여 통계의 비교

2015년 자료로 사적 이전과 상속증여 총액을 살펴본 것이 <표 1-4>에 나와 있다. 사적 이전소득의 총액은 노동패널에서 31조 9,070억 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40조 4,96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적 이전지출 총액은 노동패널에서 36조 1,370억 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41조 1,73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입과 지출 모두 노동패널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액이 높게 조사되었다.

상속증여수입 총액은 노동패널에서 4조 2,020억 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조 7,390억 원이 조사되었다. 국세통계(상속세와 증여세) 자료에서는 상속증여액이 총 24조 9,130억 원으로 나타난다. 가계조사가 상속증여에

<표 1-4> 자료별 이전소득과 상속증여 총액(2015년)

(단위: 십억 원)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
사적 이전소득	31,907	40,496	24,913
상속증여수입	4,202	1,739	
사적전 지출	36,137	41,173	

대해서는 매우 과소포착하고 있다.

노동패널자료와 국세통계에서 구간별 상속증여액과 인원을 비교하여 보여준 것이 <표 1-5>이다.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상속증여 인원은 국세통계에서 59,888명인데, 노동패널자료에서는 12,646가구로서 노동패널의 포착률은 21.1%이다.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상속증여액은 국세통계에서 2조 3,720억 원인데 노동패널자료에서는 4,400억 원으로 노동패널자료의 포착률은 18.6%이다. 1억 원 초과 구간을 보면, 노동패널의 포착률은 크게 감소한다. 노동패널에서는 상속액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만 포착이 되고 있다. 노동패널에서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중치를 감안하면 9,454가구이고, 표본수로만 따지면 4가구이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노동패널이 국세통계에 나타난 상속증여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상속증여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만 포착되고 있다. 상속증여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국세통계에서 59,888명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49,609가구이다. 상속액이 1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가계동향조사가 포착된 인원이 2.5배 많다. 포착된 인원은 많지만 액수는

<표 1-5> 노동패널자료와 국세통계의 구간별 상속증여액과 인원 비교(2015년)  
(단위: 명, 십억 원)

소득구간	국세통계		노동패널		비율	
	인원	상속 증여액	가구	상속 증여액	인원	상속 증여액
1억 이하	59,888	2,372	12,646	440	0.211	0.186
3억 이하	26,575	3,507	6,750	1,869	0.254	0.533
5억 이하	6,451	1,748	0	0	0	0
10억 이하	7,223	3,303	2,704	1,893	0.374	0.573
20억 이하	4,581	3,842	0	0	0	0
30억 이하	1,487	2,051	0	0	0	0
50억 이하	757	1,724	0	0	0	0
50억 초과	766	6,195	0	0	0	0
합 계	107,728	24,743	22,101	4,202	0.205	0.170

〈표 1-6〉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구간별 상속증여액과 인원 비교(2015년)

(단위: 명, 십억 원)

소득구간	국세통계		가계동향조사		비율	
	인원	상속 증여액	가구	상속 증여액	인원	상속 증여액
1억 이하	59,888	2,372	149,609	1,739	2.50	0.733
3억 이하	26,575	3,507				
5억 이하	6,451	1,748				
10억 이하	7,223	3,303				
20억 이하	4,581	3,842				
30억 이하	1,487	2,051				
50억 이하	757	1,724				
50억 초과	766	6,195				
합 계	107,728	24,743	149,609	1,739	1.39	0.07

매우 적다.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상속증여 총액은 국세통계에서 2조 3,720억 원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조 7,390억 원으로, 가계동향조사의 포착률이 73.3%이다. 가구당 상속증여액은 국세통계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에서 매우 적다. 가계동향조사에는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국세통계 대비 상속증여총액의 포착률은 가계동향조사에서 7%이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노동패널자료는 고소득 가구 표본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몇 가구 포함되어 있다. 고소득 가구 표본이 상대적으로 덜 포함되어 있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억 원 초과 상속증여의 경우는 표본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가계조사는 모두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속증여액을 매우 과소포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액의 상속증여액은 여러 가지 공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상속증여액만 포착되고 있다. 가계조사에서는 고액의 상속증여액은 포착되지 않는 반면, 소액



의 상속증여액과 사적 이전소득은 잘 포착되고 있다.

## 제4절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의 비교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보았다. 연령은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나누었다. 이하 표와 그림에서 ‘20대 초’와 ‘20대 후’는 각각 가구주 연령 21~25세와 26~30세를 가리킨다.

20대 초반에 사적 이전소득은 노동패널에서 연 231.2만 원이고 가계동향조사에서 336.6만 원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 후반의 경우에도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각각 183.3만 원, 220.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30대 초반에도 노동패널자료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수입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두 조사에서 사적 이전수입의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이다. 가구주 연령이 40대 초반의 경우 사적 이전수입은 노동패널자료에서 110.4만 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300.5만 원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매우 크다.

가구주 연령 60대 초반 이후에는 두 조사에서 사적 이전수입의 차이가 다시 줄어든다. 60대 초반 사적 이전소득은 노동패널에서 158.1만 원이고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14.5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노동패널자료에서 조사된 이전소득액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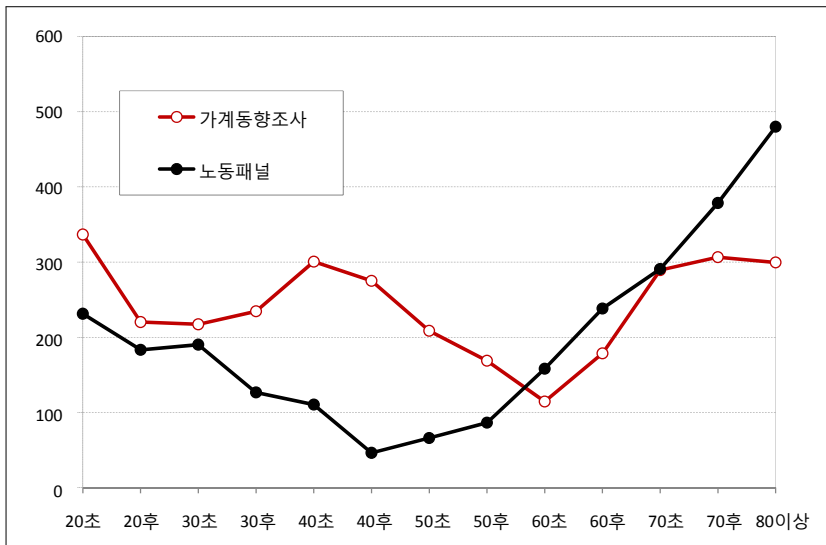
40대부터 50대까지 두 조사에서 사적 이전수입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사적 이전수입의 연령별 양상도 두 조사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대에 사적 이전수입이 가장 많고 이후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사적 이전수입이 감소하여 40대 후반에 가장 낮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입은 뚜렷하게 U자형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패널조사로 파악하면, 소득이 낮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부모나 자녀로부터 사적 이전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고 자산을

〈표 1-7〉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2015년)  
(단위: 만 원/년)

연 령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지출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20초	231.2	336.6	53.9	45.7
20후	183.3	220.2	139	135.9
30초	190.2	217.2	217	205.7
30후	126.6	234.5	253.7	219.4
40초	110.4	300.5	223.6	251.4
40후	46.2	275.1	213.3	306.6
50초	66	208.6	198.5	371.5
50후	86.4	168.7	180.7	292.8
60초	158.1	114.5	313.7	199.0
60후	238.2	178.6	136.3	192.3
70초	290.8	289.4	197.7	127.4
70후	378.6	306.5	109.9	127.6
80 이상	479.9	299.5	75	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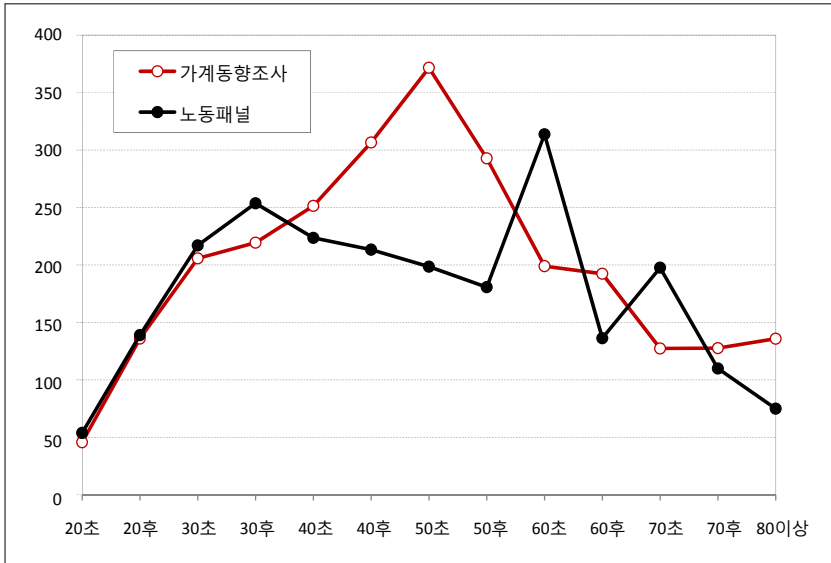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사적 이전수입(2015년)

(단위: 만 원/년)



[그림 1-2]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2015년)

(단위: 만 원/년)



어느 정도 형성한 중년시기에는 사적 이전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노동패널조사와는 달리 가계동향조사에는 사적 이전소득 수입의 연령별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가계동향조사에서 20대 초반과 70대 이후에 사적 이전소득 수입이 많은 것은 노동패널조사와 같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40대에도 사적 이전소득 수입이 20대나 70대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40대와 50대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모두 평균적으로 많은 때문인데, 여전히 사적 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1-2]에 나와 있다. 가구주 연령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지출액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대 후반 사적 이전지출액은 노동패널자료에서 253.7만 원, 가계동향조사에서 219.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40대 초반까지는 연령별 양상도 동일하다. 20대에 사적 이전지출이 매우 낮고, 이후 연령이 늘어나면서 사적 이전지출이 점차 증

가한다. 소득이 낮은 청년기에는 사적 이전지출이 적고,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면서 사적 이전지출도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0대 이후 사적 이전지출은 두 조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60대 이후에는 노동패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본 수가 적어서 사적 이전지출액에서 일부 큰 표본값이 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때는 40대와 50대이다. 50대 초반 사적 이전지출액은 노동패널자료에서 198.5만 원인데 반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371.5만 원이다. 20대와 30대 청년기와 60대 이후 노년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므로 사적 이전지출이 중장년기에 비해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은 40~50대가 가장 높은 역U자형을 보여준다.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30대 후반에 사적 이전지출이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이전지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노동패널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연령별 소득 양상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소득의 양상은 역U자형을 보여,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40~50대 중장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지출도 마찬가지로 역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사적 이전지출이 적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을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수입은 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적을 것이다. 노동패널의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적 이전수지란 사적 이전수입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수지는 모두 U자형을 보인다. 20대에는 사적 이전수입이 사적 이전지출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는 흑자를 나타낸다. 이후 흑자폭이 감소하고 40대와 50대에는 사적 이전지출이 사적 이전수입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60대 이후에는 다시 사적 이전수입이 사적 이전지출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는 연령별 사적 이전수입과 지출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사적 이전수지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의 대체적인 양상을 보면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가 비슷하지만, 수치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시기도 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사적 이전수지에서 차이가 난다. 중장년 시기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인 반면, 노동패널자료에서는 적자이다. 중장년 시기에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이

〈표 1-8〉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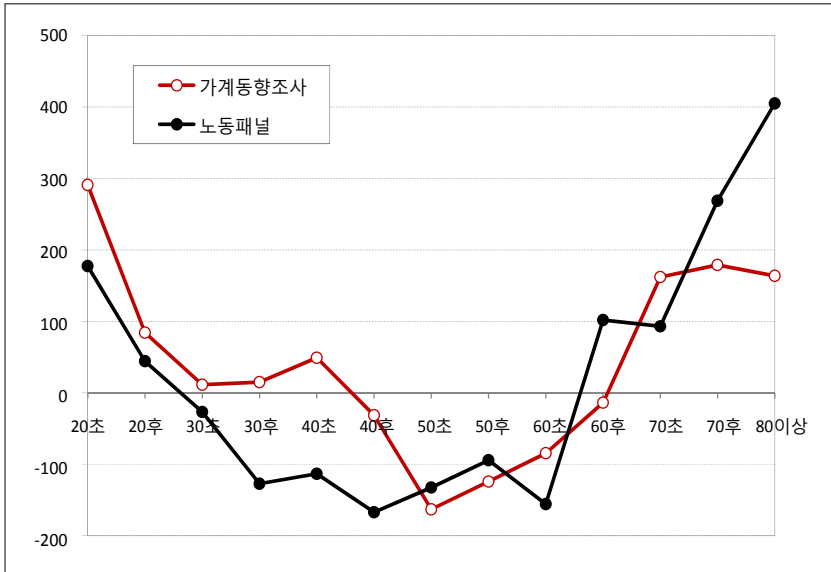
(단위: 만 원/년)

연 령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20초	177.3	290.9
20후	44.3	84.3
30초	-26.8	11.5
30후	-127.1	15.1
40초	-113.2	49.1
40후	-167.1	-31.5
50초	-132.5	-162.9
50후	-94.3	-124.1
60초	-155.6	-84.5
60후	101.9	-13.7
70초	93.1	162
70후	268.7	178.9
80 이상	404.9	163.7

주: 사적 이전수지 = 사적 이전수입 - 사적 이전지출.

[그림 1-3]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령별 사적 이전수지(2015년)

(단위: 만 원/년)



전소득 수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 소득 양상은 역U자형이다. 이로부터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일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기와 장년기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에서의 조사결과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지출이 사적 이전수입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패널자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중장년기에도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여서 이러한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절 결 론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 및 증여를 조사

하는 방식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에서 1개의 설문 문항만 있어서 간략하게 묻고 있는 반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주 부모, 배우자 부모, 따로 사는 자녀, 그 외 친척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을 각각 따로 묻고 있다.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 모두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속증여액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고소득 가구 표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패널 자료에는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넘는 가구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표본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소득의 양상은 역U자형을 보여, 청년기와 노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40~50대 중장년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지출도 마찬가지로 역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사적 이전지출이 적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을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의 연령별 사적 이전지출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사적 이전수입은 U자형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적을 것이다. 노동패널의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양상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별 소득 양상은 역U자형이다. 이로부터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일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기와 장년기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에서의 조사결과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연령별 소득 양상으로부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기에는 사적 이전지출이 사적 이전수입보다 많아서 사적 이전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패널자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중장년기에도 사적 이전수지가 흑자여서 이러한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년 전 소득을 회고하여 답해야 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매월마다 가계부에 적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측정오차에 관해서는 가계동향조사가 노동패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에서 매우 자세하게 묻고 가계동향조사에서 1개의 설문문으로 간단하게 묻고 있다. 이전소득의 총량을 묻는 가계동향조사보다는 자녀, 부모, 친척을 구분하여 묻고 현금과 현물을 또 구분하여 묻고 있는 노동패널에서 측정오차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방식과 설문문항을 보면 두 조사의 장단점이 엇갈려서, 어떤 조사가 이전소득에 대해 측정오차가 적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두 조사가 조사방식과 설문 문항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 총액 조사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적 이전 총액에 대해서는 조사방식이나 설문방식 차이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및 지출 양상에 대해서는 두 조사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 40대에도 이전소득 수입이 20대나 70대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40대에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평균적으로 많은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결과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총량만을 묻고 있는 방식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 제 2 장

##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초과근로수당의 특징

### 제1절 서론

초과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에는 조기출근, 잔업, 휴일근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간외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고용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 주에 대하여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단, 연소자(15~18세)의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동법 제52조). 그러나 실제로는 저임금구조와 결부된 시간외근무가 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8시간 노동제는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긴 실정이다. 또한 주 40시간 및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이 산입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2000년 9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당 최대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

간 + 휴일근로(토, 일) 16시간)까지 허용되어 왔다.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12시간까지(이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로 제한하는 논의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무를 제한·금지하는 입장에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최저 50%를 할증하여 지불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과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이러한 할증임금에 대한 규정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의 최대 할증률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가 휴일 야간에 진행된 경우, 연장근로 기본 할증률 50%에 휴일 할증률 50%와 야간근로 할증률 50%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어, 원칙상 통상임금의 2.5배(250%)까지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근로관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배규식 외, 2011; 배규식, 2012; 김유선, 2008; 김유선, 2011 등),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법적인 논의(이재욱, 2014; 오세웅, 2015 등)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즉, 초과근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수당이 적절하게 지불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과근로와 이 초과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초과근로 관련 변수들의 통계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비교함으로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초과근로 관련 조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동조사가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노동패널에서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되는가?

-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작성·계산되며 그 작성 방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 노동패널에서 초과근로수당의 수준과 할증률은 어느 정도이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 제2절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의 조사 방법 및 한계점

### 1.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조사

#### 가. 초과근로 여부 및 시간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동관련 종단면 조사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패널자료에 대한 개관은 다시 중복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 한계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내용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은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여부 및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주된 일자리에 한하여 조사되고 있다. 특히,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의 중요한 특징은 조사 대상이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정규 근로시간 존재 여부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 주당 정규

1) 한국노동패널의 자세한 소개는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자료 User's Guide』(2017)를 참조하면 됨.

근로시간과 주당 정규 근로일수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들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초과근로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일수를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정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개념, 즉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묻고 있지만,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주일 평균이나 월평균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언제 발생했는지, 즉, 소정근로일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휴일(또는 야간)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이나 아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조사되고 있지 않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초과근로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 항목은 본인의 판단, 상급 지휘자의 판단, 관행에 따름, 기타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은 초과근로의 자발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나.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에 이어,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이 이어진다.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설문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초과근로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1) 초과근로무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초과근로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일정한 기준이 없다 등의 3개의 응답 항목이 주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액수는 월평균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은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sup>2)</sup>

2) 이때 만약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평균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4.3을 곱하여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환산한 다음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을 이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

초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방식(할증률)과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계산 방식의 범주를 응답항목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방식에 대한 설문의 구체적인 응답항목은 (1) 통상시급보다 적게, (2) 통상시급과 똑같이, (3) 통상시급의 101~125% 정도, (4) 통상시급의 126~150% 정도, (5) 통상시급의 151% 이상, (6) 잘 모르겠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을 범주형 응답항목으로 대담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임금 정보가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이 직접적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정규근로시간에서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존재해야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임금 정보는 ‘모든 실근로시간에 대한 총 임금’이고 여기에는 정규근로와 초과근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sup>3)</sup> 이렇게 임금이 정규근로에서의 임금소득과 초과근로에서의 임금소득으로 분리되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 근로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범주형으로 주어져 할증률 수준이 간접적으로만 파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설문구조 때문인 것이다.

이 밖에도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에 대한 반응, 즉 할증률이 유지되거나 감소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설문도 제7차와 제8차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

어 구할 수 있다.

3) 또한, 임금 항목에 대한 설문도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3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액수를 응답하게 하고 있지만, 상여금 및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통상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구조이다.

##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조사

### 가. 초과근로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소정실근로일수)와 시간(소정실근로시간),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한 초과실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때 초과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합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개인조사표, 2017). 또한 2015년부터는 초과실근로시간의 항목에 휴일실근로시간(초과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초과근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초과실근로시간 조사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지불’ 초과근로시간이 아닌 ‘실’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10시간의 ‘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이보다 많은 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초과근로시간은 ‘실’ 초과근로시간인 10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sup>4)</sup>

### 나. 초과근로수당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급여는 크게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구분되며,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기본임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당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수당이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통상

4) 반면에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불’ 초과근로시간인지 ‘실’ 초과근로시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기타수당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이렇게 소정근로일에 실제 근무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액급여와 초과실근로에 대한 초과급여가 각기 대응되어 조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시간당 초과급여의 비율을 계산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sup>5)</sup>

### 제3절 초과근로수당의 특징

#### 1. 분석 기간 및 방법

초과근로수당의 작성 방법 및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수당 통계의 적절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 근로하는 표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두 자료는 조사의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분석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분석할 경우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근로자도 임금근로자로 한정한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에 대한 설문은 임금근로자 중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에서의 분

5) 그러나 초과급여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각기 세분화되어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엄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석 대상 표본을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로 범위를 좁혀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은 그동안 표본 이탈(sample attrition)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9년(12차 조사)에 1,415가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표본이 추가되어 대표성이 제고된 2009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분석 대상 기간을 2009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분석이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5년 자료임을 고려하여 두 조사 자료의 분석 기간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일치시켰다.

본 연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비교 분석할 때 초과근로수당 통계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수당이 작성되는 방식 및 과정도 두 조사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의 통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초과근로수당의 분포와 할증률 등 다양한 관련 주제들에 대해 두 통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통계 개선을 위한 사항들과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대상으로 삼은 두 통계가 표본조사를 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표본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각 통계 수치를 계산할 때 각 통계에서 제공하는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였다.

## 2. 초과근로 수행자의 비중

### 가.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 전체

먼저 초과근로수당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초과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초과근로를 한 사람의 비중을 한국노동패널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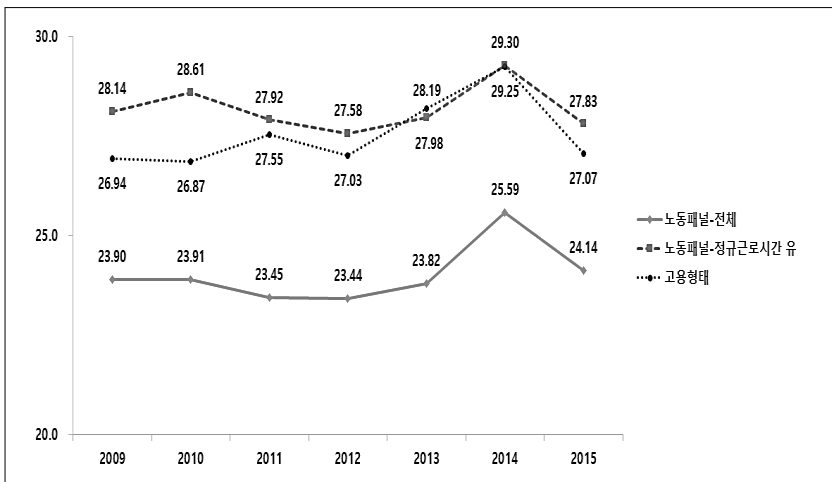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두 통계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초과근로 수행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초과근로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초과근로 여부를 판별하였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초과실근로 시간에 대한 응답이 0(결측인 경우도 포함)인 경우를 초과근로 미참여자로 간주하였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에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대략 4%포인트 정도이며, 거의 모든 연도에 걸쳐 그 격차가 유지된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로 참여자 비율을 계산할 경우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그 수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표본을 정규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근로자, 즉 초과근로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게 되면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있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의 차이가 거의 사라

[그림 2-1]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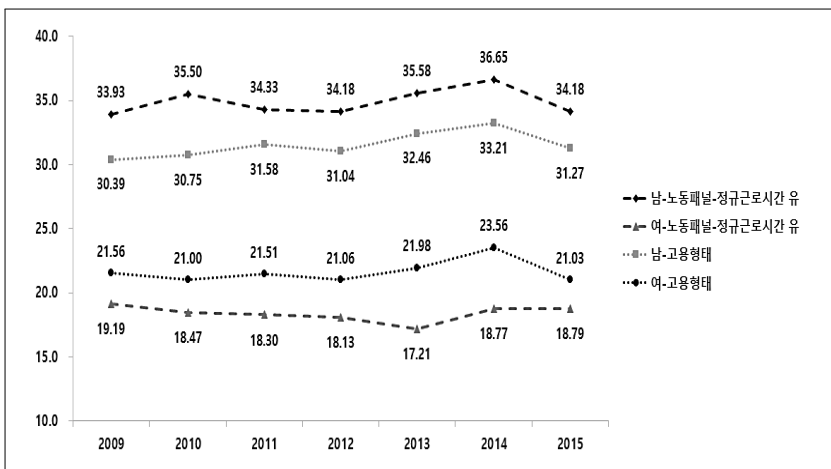
지게 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모두 초과근로 참여자 비율이 대략 28~29% 수준이며, 두 조사 간 초과근로 수행 근로자 비중의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또한 그 추세도 두 시계열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자료가 높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로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해 설문이 진행되는 ‘정규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분석해야 안정적이고 비교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 나. 성별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이제 초과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의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이때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표본은 초과근로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는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별 초과근로 수행자 비중의 특징은 여자에

[그림 2-2]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성별)

(단위 : %)



주: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비해 남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초과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또한, 초과근로 수행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가장 최근(2015년)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의 추세는 남녀 모두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남녀간 초과근로 수행자 비중의 격차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자의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약 31~32% 수준인 데 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대략 34~35% 수준으로 더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약 2~3%포인트 더 낮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두 조사 모두 남녀에 대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 다. 고용형태별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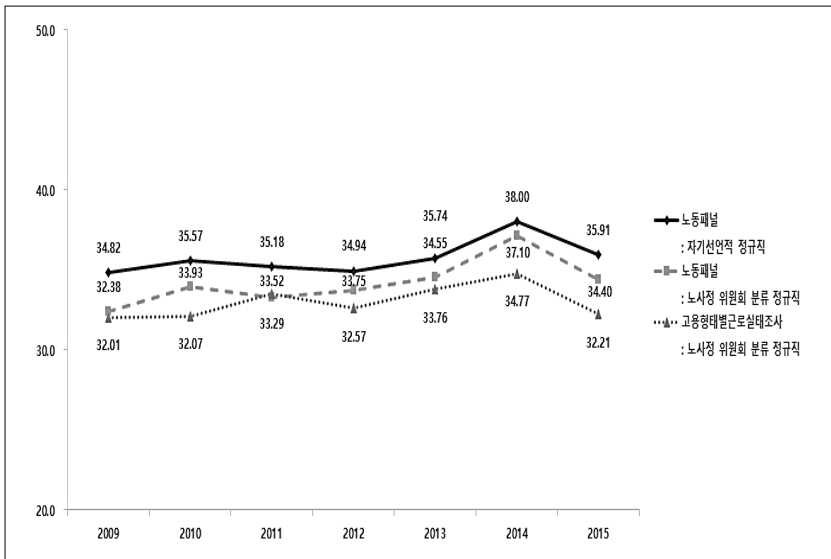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율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그림 2-3] 및 [그림 2-4]와 같다.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개념이 아니다. 이는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공식적인 정의 및 분류는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서의 비정규직은 크게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및 일일근로 등)로 분류되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노동패널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다분히 자기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비정규직의 개념에 따라 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고용계약의 기간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다행히 노동패널에서

는 이러한 세부정보를 조사하기 때문에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정의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sup>6)</sup>

정규직 근로자들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은 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조사하는 통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기선언적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식개념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초과근로를 수행하는 비율이 1~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난다. 만약 정규직의 개념을 공식적인 노사정위원회 기준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두 조사 간 격차는 2%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다. 또한, 전반적인 정규직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의 시계열적 패턴도 두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림 2-3]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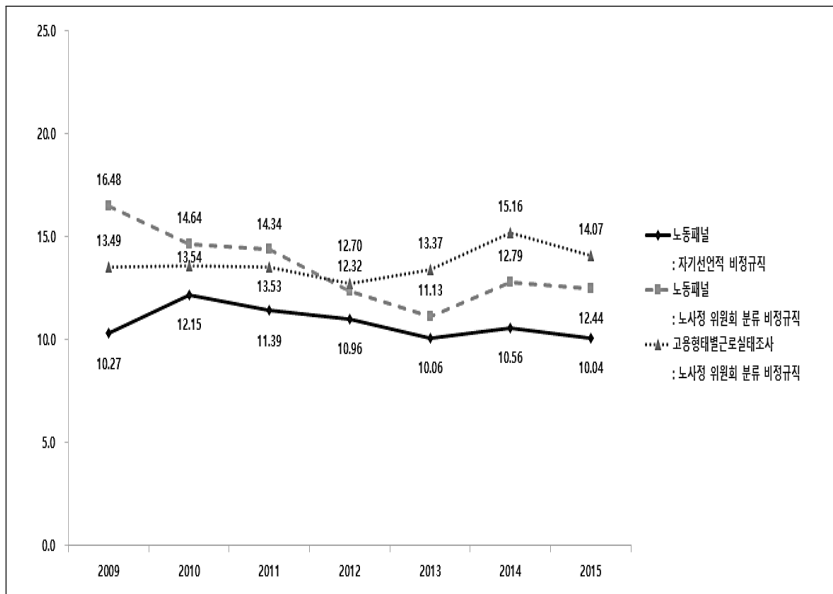
- 6)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와 고용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여부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분석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한 결과는 [그림 2-4]에 나타나 있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근로자와 공식적인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초과근로 참여 비율을 보면, 공식적인 개념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참여율이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2~3%포인트 정도 높다. 그러나, 공식적 기준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 초과근로 수행자 비율의 격차는 대략 2%포인트 내로 크지 않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표본 대표성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3]과 [그림 2-4]를 비교해 보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비율적으로 3배 정도 더 많이 초과근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참여 비율은 10% 초반에 불과하다.

[그림 2-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중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초과근로 참여자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비중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할증률까지 적용하여 통상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될 수 있다.

초과근로 수행자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로 판별하였고,<sup>7)</sup>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초과급여 변수가 0인 경우를 미지급자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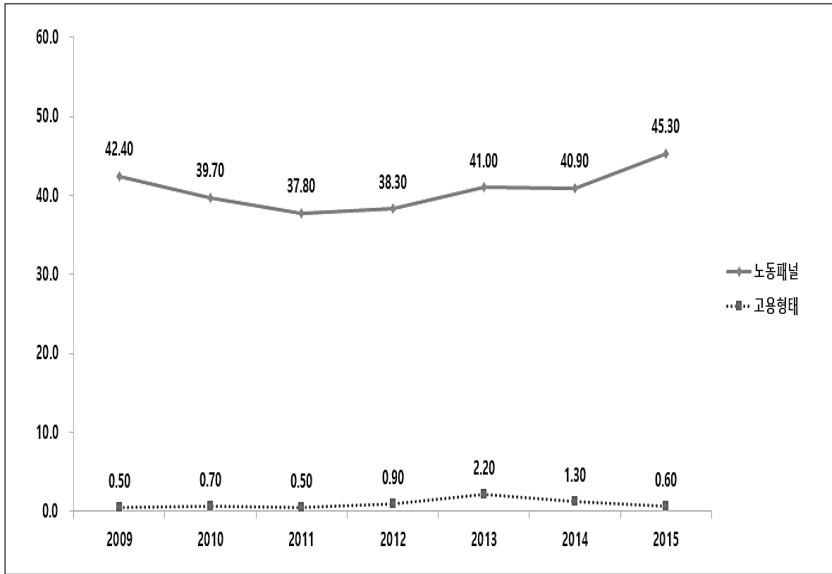
초과근로 수행자 중 초과근로 미지급자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5 참조)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초과근로 수행자의 40% 정도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거의 0에 가깝다.

두 조사 간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 비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 비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은 초과근로의 조사 방식에 있어 두 통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은 개인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고 있어 응답에 있어 오류 및 측정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응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응답을 병렬적으로 연계하여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중

7)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초과근로에 관한 설문은 정규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임금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 비율은 이들 정규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이다.

[그림 2-5] 초과근로 수행자 중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자의 비중

(단위 : %)



철타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초과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할 경우에는 초과근로 여부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응답 정보를 응답자에게 재확인시키면서 응답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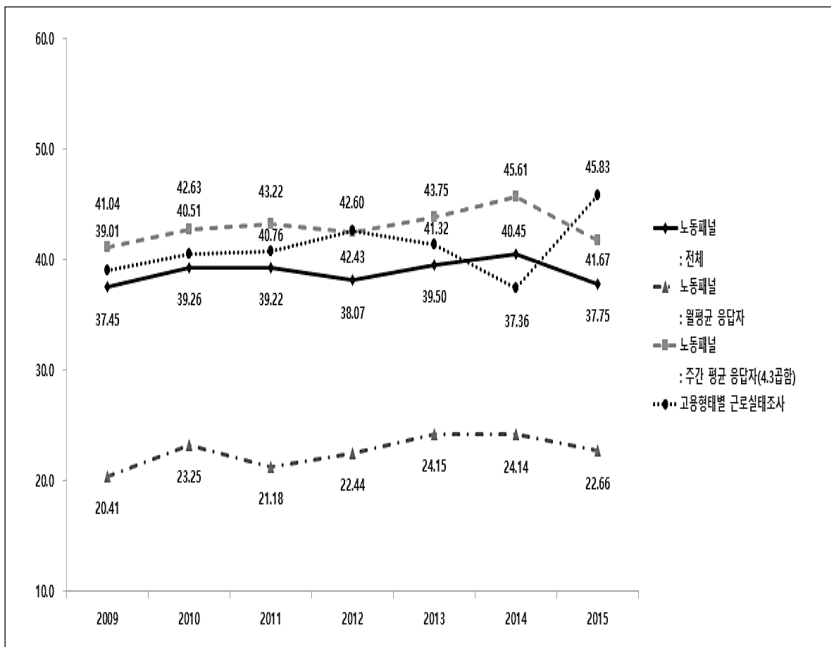
반면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기업체의 담당자로 하여금 각종 임금장부 등을 토대로 표본추출된 개별 근로자의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의 정확성이 한국노동패널에 비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초과급여가 있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있는지를 또 다시 중첩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 참여 여부가 매우 정확하게 판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비율 수치는, 포괄임금제도의 시행 가능성과 불법적 미지급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만큼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

로자들이 그 액수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응답 거절이 나타나거나 응답의 귀찮음 등의 이유로 대충 초과근로수당이 0이라고 응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에 관한 응답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 추출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분석에 앞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등의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응답자들이 주당 평균 초과시간과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선택하여

[그림 2-6]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하여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 그 수치가 초과근로시간의 총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월평균 근로시간 환산 수치는 애초부터 월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월등하게 높다. 구체적으로, 월평균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한 사람들은 월평균 23~24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주당 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환산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43시간 정도나 된다. 이들을 모두 합쳐 계산할 경우에는 한국노동패널 근로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대략 38~39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최근에 커지긴 하였지만 대략 4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전체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과 상당히 유사한 수치이다.

## 5. 초과근로수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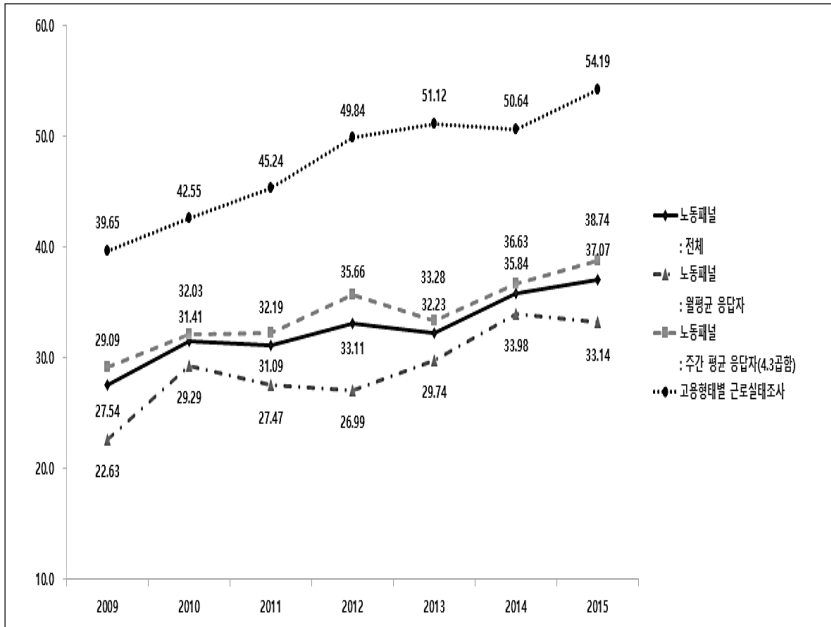
### 가.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 초과근로수당 또는 초과급여액을 월평균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쉽게 가능하다. 이번에는 두 조사에서 초과급여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초과근로를 수행하여 일정 정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가 [그림 2-7]에 제시되어 있다.<sup>8)</sup>

8)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의 초과근로수당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림 2-7]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단위: 만 원)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비해 50% 가까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주간 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초과근로수당이 다소 높지만 그 격차가 의미를 가질 정도로 크지는 않다.

#### 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월평균 초과근로시간과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정보를 결합하면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통계를 고용형태별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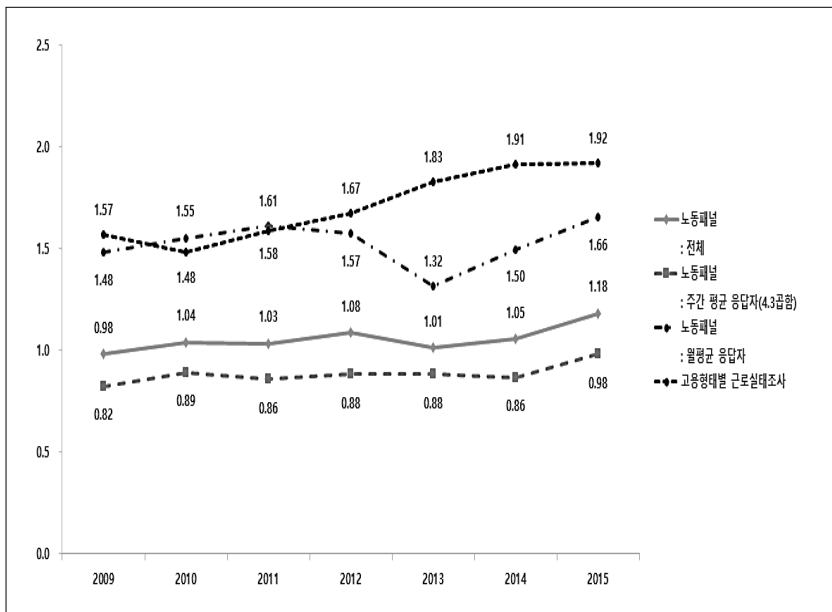
와 비교하여 (매 시점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상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굳이 초과근로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 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어 당해 명목임금 기준의 초과근로수당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다.

먼저,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에 비해 상당히 낮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조사방식이 실제 장부 등을 참조로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어서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과소하게 응답하거나 초과근로시간을 과대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만을 따로 살펴보면, 주간 평균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이 월평균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월평균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그림 2-8] 초과근로 참여자들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단위: 만 원)



의 수치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과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분석할 경우 월평균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응답하는 그룹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응답자들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이 최근 들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적다는 사실은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조사에 있어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6.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분포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슈는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설정된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할증률(50%)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휴일 및 야간)에 따라 추가적인 할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선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설문항목의 구성상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해내기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초과근로수당 계산방식에 대한 설문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의 통상임금 대비 지급 정도를 범주형태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범주는 크게, ‘통상시급보다 적게’, ‘통상시급과 똑같이’, ‘통상시급의 101~125% 정도’, ‘통상시급의 126~150% 정도’, ‘통상시급의 151% 이상’, ‘잘 모르겠음’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소정근로일에 실제 근무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액급여와 초과실근로에 대한 초과급여가 각기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방법(할증률) 분포와 비교하기 위해, 고용형태

9) 본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 먼저,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 수당+기타수당)액을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소정실근로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고, (2) 앞에서 구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이 소정실근로시간의 시간당 임금으로 나눔으로써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계산하였으며, (3)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기초로 한국노동패널에서의 계산방법과 같이 범주를 분류하였다. 다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초과근로수당 계산방법의 범주를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할 때 ‘통상시급과 똑같이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응답의 오차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시간당 초과급여의 비율이 0.97~1.03인 경우를 ‘통상시급과 똑같이 지급하는 경우’로 파악하였다.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분포를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두 조사 모두에서 초과근로수당을 통상시급 이하로 지급하는 비율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그 비중이 20%가 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40%나 된다. 반면 통상시급보다 151%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24% 정도이고 한국노동패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측정 오차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법정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초과근로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종종 이루

<표 2-1>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할증률 분포, 2009~15년)

(단위: %)

	한국노동패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상시급보다 적게	6.97	35.68
통상시급과 같이	14.98	5.81
통상시급의 101~125%	21.62	19.96
통상시급의 126~150%	46.52	14.23
통상시급의 151% 이상	9.91	24.32
합 계	100.00	100.00

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초과근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향후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초과급여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절 결 론

초과근로수당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의 특징과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초과근로 및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내용은 초과근로 참여자의 비율,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의 수준 및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등이다. 초과근로에 관해서는 장시간 근로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지만, 그에 대한 보수인 초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법제도적인 논의 외에는 그 실태가 별로 분석되지 않았다.

먼저, 초과근로 참여자의 규모를 보면,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약 28~2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참여 비율은 특히 성별로는 남성,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0%가량은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 설문조사 방식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과근로 참여자들은 월평균 4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패널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시간당 초과근로수당 통계는 전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월 단위로 응답한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 초과근로 참여자들이 법정수준 이하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 통상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12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초과근로수당 수급자는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56% 정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에는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초과근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초과근로 관련 조사 항목 및 조사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초과근로 여부,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등 서로 일관되게 응답되어야 할 항목들을 조사할 때 응답의 일관성을 중첩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응답 시 초과근로 여부에 대해 제대로 응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고,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제대로 응답했는지 그 반대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조사할 때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제대로 응답했는지를 중복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응답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또는 초과근로수당이 0인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초과근로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이 서로 관련된 각 항목들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게 이루어져도 응답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개인들이 초과근로시간이나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항목들을 응답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요한 지점마다 응답의 일관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조사 지침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할 때는 초과근로수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조사할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항목들에 대한 수치 보고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중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미지급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사유 중 포괄임금제 실시로 인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별도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시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모두)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은 ‘실근로시간’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근로시간과 지불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응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응답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개인별 조사 지침에서 근로시간에 대해 지불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명확히 하



고 있다.

넷째,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즉 할증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응답 항목이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이 다분히 주관적인 응답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범주형으로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제공하고 있는 월평균 임금 정보가 정규 실근로와 초과실근로에 대한 보수를 모두 합한 총임금 형태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수당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하여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파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은 연장근로의 형태, 즉 야간근로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그 할증률이 가중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 파악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형태를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최근에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하면서 세부 항목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도 추가한 바 있다.

## 제 3 장

##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 분석 : 한국복지패널자료와의 비교

### 제1절 서론

빈곤은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이며, 따라서 빈곤문제를 다루는 정책(anti-poverty policy)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빈곤을 다루는 문제는 빈곤을 (적어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며 빈곤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과하기 쉬워지며 그것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빈곤의 현황을 보여주는 빈곤지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요 빈곤 관련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 실태 그 자체나 빈곤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분석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는 빈곤지표의 추정치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해 도출되는 빈곤지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동일 지표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빈곤 관련 지표의 추정결과와 비교하기로 한다. 물론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이용하여서도 빈곤 지표를 추정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들 자료는 횡단면 조사자료여서 패널자료가 갖는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에는 <한국노동패널>의 시계열보다 긴 시계열을 갖고 있으나 2006년 이전의 표본은 표본구성이 <한국노동패널>과 크게 다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의 긴 시계열과 비교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선택하기로 한다.

강신욱(2015)은 유사한 작업을 소득이동성 지표에 대해서 수행한 바 있다. 물론 빈곤지표는 전체 소득계층의 소득보유 실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대한 분석과는 다르다. 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장의 연구는 앞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빈곤 역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며, 특히 빈곤층은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것은 독자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 1. 자 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9~19차 자료와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노동패널 자료를 9차 자료부터 이용하는 것은 복지패널의 1차년도 자료와 비교를 위해서이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노동패널은 9차(2005년)부터 19차(2015년), 복지패널은 1차(2005년)부터 11차(2015년)까지가 동일한 기간의 소득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12차 조사(2008년 소득 조사)에서,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7차 조사(2011년 소득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표본이 추가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빈곤지표를 산출할 때에는 이 추가표본을 포함시키고 분석하였다. 빈곤의 탈출률과 진입률을 분석할 때에도 역시 이 표본을 포함하였다. 빈곤 탈출률이나 진입률 모두 전년도에 빈곤지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추가 표본의 포함여부는 빈곤 진입률이나 탈출률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최근 5년에 걸친 빈곤지위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는 두 자료 모두 표본이 추가된 시점 이후의 자료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표본을 고려하는 것이 분석상의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두 종류의 자료 가구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빈곤 자체가 가구단위로 정의되는 개념이고, 동일한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은 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빈곤(또는 비빈곤)지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령대별 빈곤율 등 일부 지표를 추정할 때에는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가구원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가구 데이터에서도 제공되는 만큼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가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2. 소득의 단위 및 범위

소득을 이용한 분배지표를 구할 때에는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것인가 가구소득 정보를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이 가구단위로 정의되는 개념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을 사용할 것이다. 빈곤이 가구단위로 정의된다는 것은 가구 구성원들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pooling)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 식, 주 등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일상생활에서는 가구단위로 공유되는 것이 많고, 가구단위로 공유되는 자원은 가구단위의 소득으로 구매되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소득은 여러 단계에서 정의되는데,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가처분소득 범주를 사용할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text{가구 가처분소득} = \text{세후 총소득} - \text{국민연금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을 이용한 빈곤지표를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을 기

준 범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두 자료 사이에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된 소득이기 때문이다. 노동패널의 경우 가구 총소득을 조사할 때 세전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따라서 (세전소득 개념인) 시장소득이나 총경상소득 등의 범주를 복지패널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패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분석 대상 소득범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구단위의 소득을 비교할 때에는 가구원 수의 차이를 감안해 주기 위해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장의 분석에서 균등화지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모든 가구소득은 우선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빈곤선과 빈곤지표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예컨대 중위소득 값을 추정할 경우 표본을 가구원 수별로 분리하여 중위값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전체 표본에 대해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을 구하였다.

### 3. 자료의 결합 및 가중치

각 연도의 빈곤지표를 추정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모든 표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선택하였다. 즉 노동패널자료에서는 12차 자료부터 추가된 표본을 포함하여 부여된 통합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복지패널은 7차 이후 추가된 표본에 대해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패널의 분석에서는 횡단면 일반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분석과는 달리 여러 해 사이의 빈곤지위 변화를 분석할 때에는 각 연도별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의 진입 또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접한 두 해의 데이터를 연결시켜 분석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빈곤지위 변화를 유형화할 때에는 최근 5년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단, 빈곤지위(빈곤 또는 비빈곤)를 판정할 때에는 각 연도 안에서 빈곤지위를 판정하였다.

인접한 두 해를 연결하여 빈곤진입과 탈퇴를 분석할 때에 노동패널자료의 가중치는 1998년 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5년간에 걸친 빈곤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15~19차 자료를 연결한 분석에서는 2009년

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결합된 데이터에서 가장 마지막 연도의 가치 값을 이용하였다.

## 제3절 주요 빈곤지표

### 1. 정태적 빈곤지표

이 장에서 사용하는 빈곤 관련 정태적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즉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와 빈곤의 깊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분된다.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빈곤율이다.

빈곤율(poverty ratio, 또는 head count ratio)은 전체 집단 가운데에서 빈곤층의 비율, 즉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집단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빈곤율( $H$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 = \frac{Q}{N}$$

여기서  $N$ 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  $Q$ 는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혹은 가구) 수이다. 비교 단위를 가구로 정의하는가 개인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가구빈곤율과 빈곤인구율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의된 빈곤율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당연히 값이 작을수록 빈곤인구의 비율이 작은 것이다.

빈곤의 깊이(depth)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인 것이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이다. 이 두 개념은 종종 구분되지 않거나 이름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sup>10)</sup>

빈곤격차(poverty gap)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빈곤선을  $PL$ 이라고 하고, 빈곤층의 소득을  $I$ 라고 하면 빈

10) 이 지표의 명칭은 이준구(1992)에 따른 것이다.

곤격차는  $(PL - I)$ 로 정의된다. 이때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 집단의 빈곤격차는 0이라고 간주하자. 그렇다면 빈곤격차(PG)는 다음과 같다.

$$PG = \begin{cases} PL - I, & \text{if } I < PL \\ 0, & \text{if } I \geq PL \end{cases}$$

이때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PGR)과 소득격차비율(income gap ratio, IG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GR = \frac{1}{n} \sum_{i=1}^n \frac{PG}{PL}$$

$$IGR = \frac{1}{q} \sum_{i=1}^q \frac{PG}{PL}$$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 모두 가구의 빈곤격차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을 평균한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빈곤격차비율은 전체 인구에 대해, 소득격차비율은 빈곤층에 국한하여 평균한 것이다. 빈곤격차비율이나 소득격차비율 모두 0~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비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은 빈곤층의 소득이 거의 빈곤선에 근접한 소득이란 의미이다. 달리 말하자면 빈곤층의 소득과 비빈곤층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고, 빈곤 탈출이 그만큼 용이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소득격차비율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대부분의 빈곤층 소득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이 같은 두 사회(혹은 상태) 가운데 한 사회는 소득격차비율이 작고 다른 사회는 100%에 가깝다면 후자의 사회가 그만큼 빈곤퇴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2. 동태적 빈곤지표

한편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을 들 수 있다. 빈곤진입이란 전년도에는 비빈곤층이었으나 당해연도에 빈곤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빈곤탈출은 전년도에는 빈곤층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비빈곤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빈곤진입률(\%)} = 100 \times \text{빈곤진입자/전년도 비빈곤층}$$

$$\text{빈곤탈출률(\%)} = 100 \times \text{빈곤탈출자/전년도 빈곤층}$$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이 전년의 빈곤지위에 비해 당해 연도의 빈곤지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빈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연속되는 5년의 시간에 걸쳐 빈곤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먼저 5년 중 한 번도 빈곤상태에 놓였던 적이 없다면 이를 빈곤 비경험층이라고 구분한다. 5년 중 한 번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면 이들은 빈곤경험층이다. 빈곤경험층 가운데 3년을 연속하여 빈곤상태에 놓였던 집단을 지속빈곤층이라고 보았다. 3년 연속은 아니지만 전체 5년 중 3년 이상 빈곤상태였던 집단을 만성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빈곤경험층 가운데 만성빈곤이나 지속빈곤층이 아닌 집단을 일시빈곤층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이들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의 동태적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하는 이러한 자료 및 지표에 근거하여 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와 복지패널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 제4절 빈곤의 정태적 특성 비교

### 1. 빈곤선

먼저 두 자료상에서 계산된 빈곤선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선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연간 가구 처분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중위값의 50%선이고, <표 3-1>에서는 그 값을 만 원 단위로 나타냈다. 빈곤선은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복지패널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노동패널의 빈곤선이 약 연 44만 원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빈곤선의 약 3.7%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두 자료의



빈곤선 차이는 연소득 기준으로 약 20만~80만 원 사이였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만 5천~6만 5천 원에 해당되는 값이다.

빈곤선의 수준뿐만 아니라 빈곤선의 변화 추이 면에서도 두 자료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선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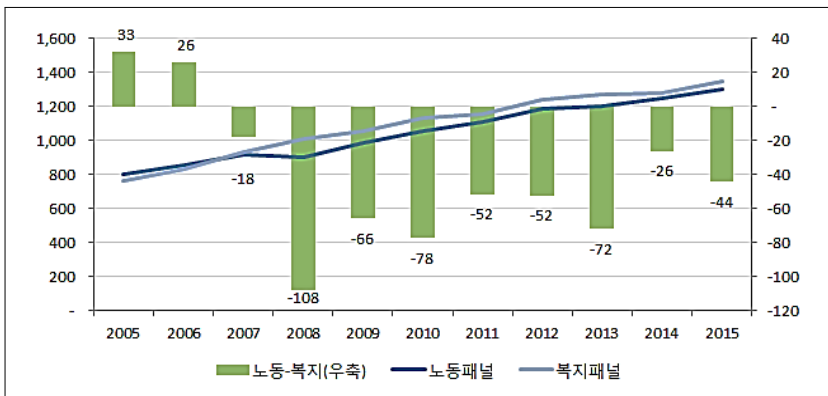
〈표 3-1〉 두 데이터의 연도별 빈곤선 비교

(단위: 만 원/년)

	노동패널(A)	복지패널(B)	빈곤선 차이(A-B)
2005	798	765	33
2006	859	833	26
2007	914	933	-18
2008	899	1,006	-108
2009	988	1,053	-66
2010	1,055	1,133	-78
2011	1,106	1,158	-52
2012	1,188	1,240	-52
2013	1,202	1,274	-72
2014	1,251	1,278	-26
2015	1,306	1,350	-44

〔그림 3-1〕 두 데이터의 연도별 빈곤선 비교

(단위: 만 원/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복지패널의 빈곤선 증가속도가 다소 빨랐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노동패널 빈곤선의 연평균 명목 증가율은 5.5%이고, 복지패널 빈곤선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 2. 빈곤율

아래의 <표 3-2>와 [그림 3-2]는 두 자료의 빈곤율을 빈곤선 수준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선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참고로 중위소득의 40%와 60%를 적용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추정하였다.

위의 <표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패널의 빈곤선이 더 낮은 값이었으나 빈곤율은 이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2010년까지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이 높다가 2011년부터는 복지패널을 이

<표 3-2> 빈곤선 수준별, 자료별 빈곤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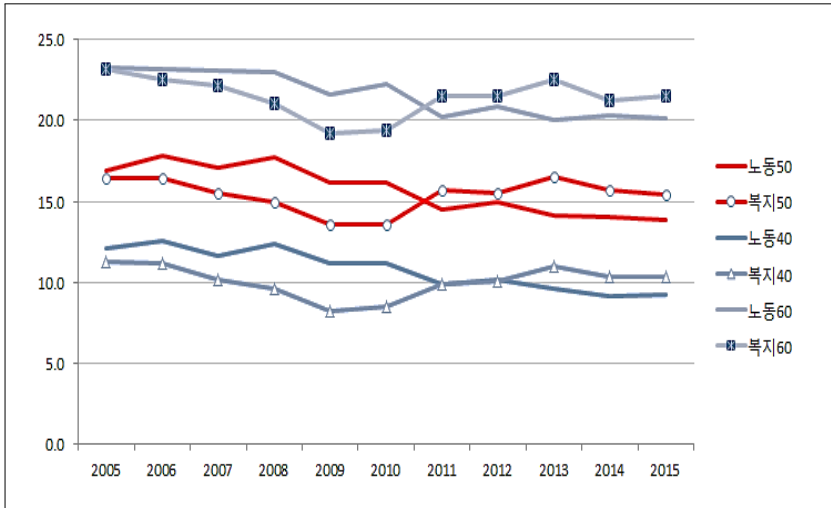
빈곤선 및 자료 연도	중위소득 50%선		중위소득 40%선		중위소득 60%선	
	노동	복지	노동	복지	노동	복지
2005	16.9	16.4	12.1	11.3	23.3	23.2
2006	17.8	16.5	12.5	11.2	23.1	22.5
2007	17.1	15.5	11.6	10.2	23.1	22.2
2008	17.7	15.0	12.4	9.6	23.0	21.0
2009	16.1	13.6	11.2	8.3	21.6	19.2
2010	16.1	13.6	11.1	8.5	22.2	19.4
2011	14.5	15.7	9.9	9.9	20.2	21.5
2012	15.0	15.5	10.2	10.0	20.9	21.5
2013	14.1	16.6	9.6	11.0	20.0	22.6
2014	14.1	15.7	9.2	10.3	20.4	21.2
2015	13.9	15.4	9.2	10.3	20.2	21.5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그림 3-2〕 빈곤선 수준별 빈곤율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용하여 추정한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자료는 복지패널의 표본 추가가 이루어진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율 추이의 역전 현상이 복지패널의 표본개편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자료 사이의 빈곤율 격차가 변화하는 양상은 빈곤선 수준 간에도 유사하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두 자료 사이의 빈곤율 격차가 커졌다. 이는 이 시기에 대한 소득조사에서 복지패널이 다양한 공적 이전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연령대별 빈곤율

연령대별로 빈곤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서로 다르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율을 연령대별로 별도로 측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18~64세)에서는 미취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소득의

부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빈곤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령층의 빈곤은 대부분 취업기회의 부족이나 비자발적 실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18세 미만의 아동층 빈곤은, 본인의 소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가족, 특히 부모의 소득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근로능력이 없는 연령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연령대의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지(부양을 받고 있는지), 또는 공적연금 수입이 있는지 등의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연령대별 빈곤율은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가구에 속하는 해당 연령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빈곤가구에 속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연령대별 빈곤율을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패널자료의 가구원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원 가운데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 가구원의 수를 집계한다. 이 수를 가구가중치에 곱하면 해당 연령대의 빈곤율 추정에 필요한 가구별 연령대 인구가중치가 된다. 빈곤율을 계산할 때 이 가중치를 사용하면 연령대별 빈곤율을 얻을 수 있다. 빈곤선은 다시 중위소득의 50%선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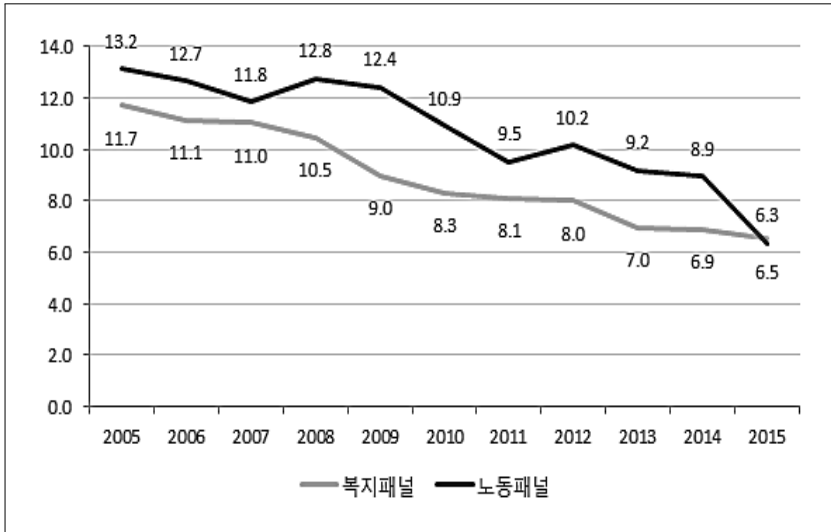
이 절의 분석에서는 연령대를 크게 삼분하여 18세 미만의 빈곤율(아동 빈곤율), 18~64세 근로연령대의 빈곤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3-3]~[그림 3-5]는 각각 아동, 근로연령, 노인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연령대에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이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추정한 빈곤율보다 대체로 높다. 그런데 그 격차가 변화하는 양상은 연령대별로 다소 다르다.

먼저 아동빈곤율은 2015년을 제외하면 전체 비교 대상 기간에 걸쳐 노동패널이 복지패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2013년을 제외하면 노동패널 빈곤율이 복지패널 빈곤율보다 높다. 특징적인 것은 노인빈곤율이다. 노인빈곤율에서 나타나는 두 자료 사이의 격차는

[그림 3-3] 아동(만 18세 미만) 빈곤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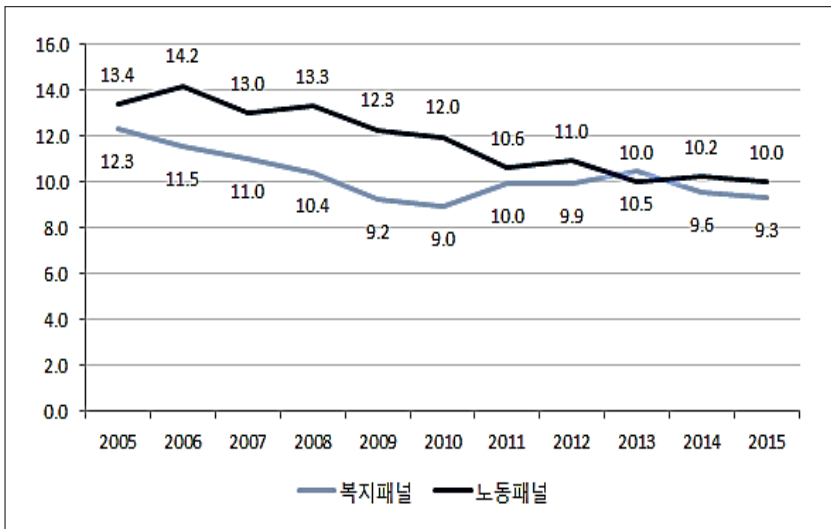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그림 3-4] 근로연령대(18~64세) 빈곤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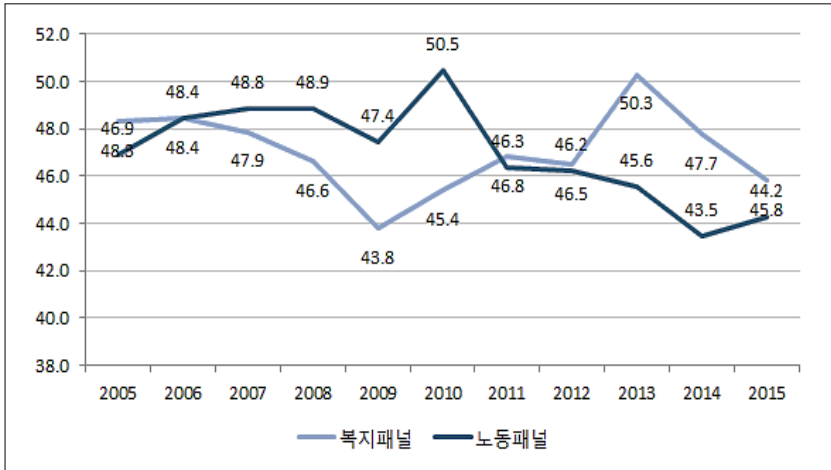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그림 3-5]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다른 연령대 빈곤율보다 크다. 또한 2011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의 역전이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빈곤율의 양상과 같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빈곤율 움직임의 방향이 달리 나타나는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즉 2010~11년 사이 복지패널의 노인빈곤율은 증가한 반면 노동패널의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2~13년 사이에도 두 자료의 노인빈곤율 움직임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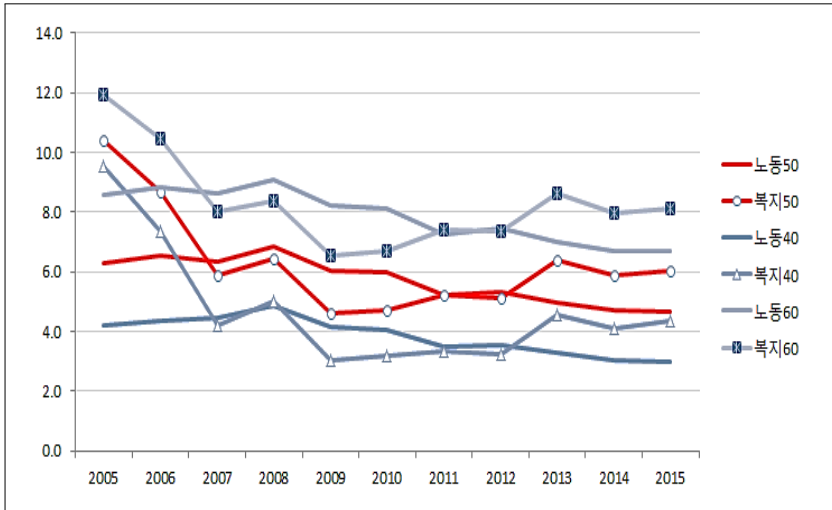
#### 4.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

두 자료상의 빈곤격차비율을 비교하면(그림 3-6 참조) 빈곤선을 비교할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노동패널 자료상의 빈곤격차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복지패널의 빈곤격차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3-7]의 소득격차비율 변화 그래프를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복지패널의 소득격차비율이 매우 예외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

[그림 3-6] 빈곤선 수준별 빈곤격차비율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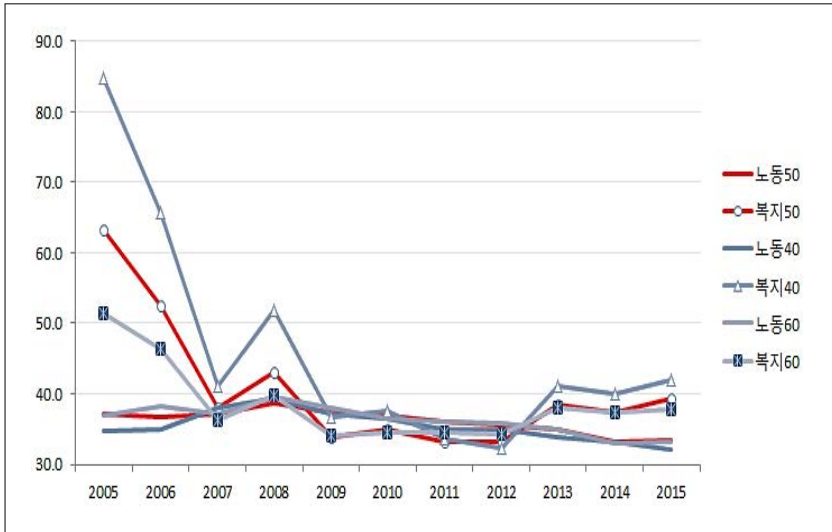
득 40%선을 빈곤선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소득격차비율이 80%를 넘었는데, 이는 이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대다수가 소득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러한 자료 간 격차는 빨리 줄어들었고, 2009~12년 사이에는 두 자료의 소득격차비율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빈곤격차비율이나 소득격차비율이 이와 같이 차이나는 것은 빈곤선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특정 소득구간에 분포하는 가구비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빈곤율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빈곤층의 다수가 빈곤선 바로 아래 소득구간에 분포하여 있는가 아니면 거의 0에 가까운 구간에 다수 분포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소득격차비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8]은 중위소득의 40~50% 구간과 중위소득의 50~60%선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한다. 40~50% 구간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은 두 자료에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50~60% 구간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은 자료 간에 차이가 크다. 복지패널에서 이 구간의 인구비율이 노동패널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1년의 경우 두 자료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빈곤선 수준별 소득격차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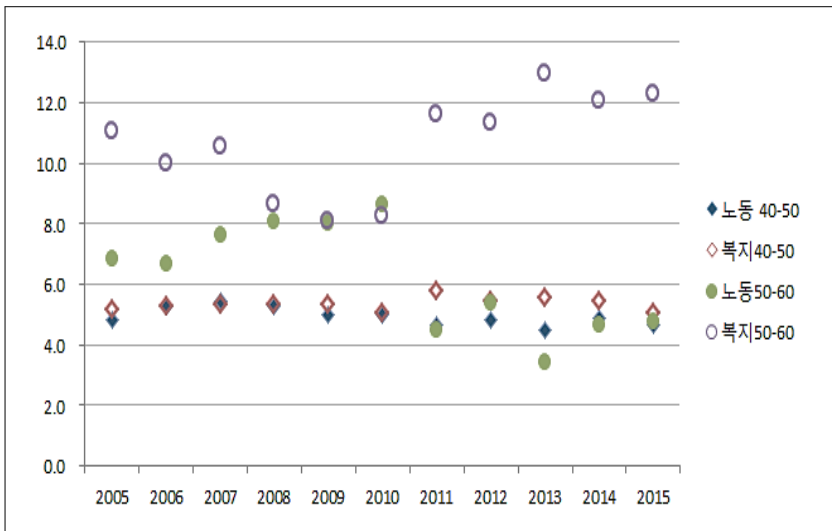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그림 3-8] 소득구간별 인구비율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 제5절 빈곤의 동태적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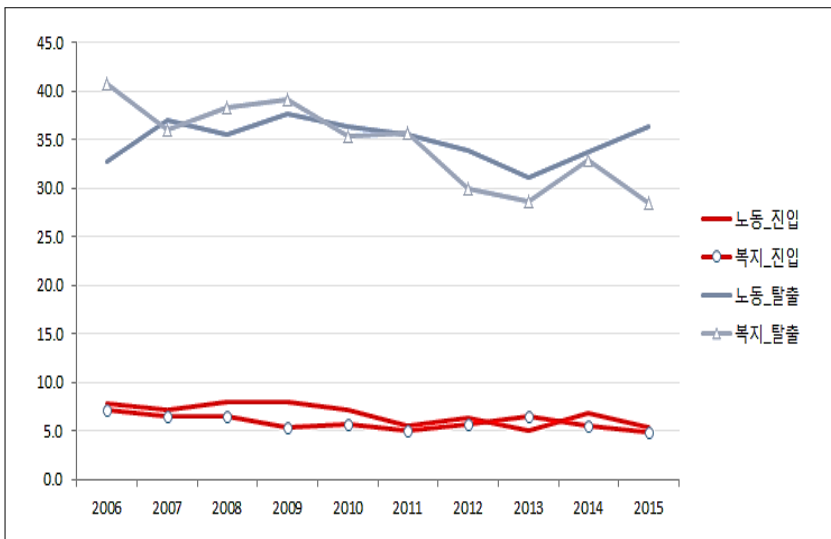
### 1. 빈곤의 진입률과 탈출률 비교

빈곤진입률은 전년도에는 빈곤층이 아니었던 인구 가운데 금년에는 빈곤층이 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반대로 빈곤탈출률은 전년도 빈곤층 인구 가운데 금년도에 빈곤층에서 벗어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율의 규모가 두 자료 사이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빈곤층으로의 진입과 빈곤층으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에 따라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9]를 보면 빈곤 진입 및 탈출률은 두 자료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빈곤진입률은 대체로 약 5~8% 사이인 것으로 추정

[그림 3-9]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 9~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한국복지패널 1~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되고, 빈곤탈출률은 대략 30~40%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패널 빈곤율이 노동패널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복지패널의 빈곤탈출률도 노동패널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아지기 시작한다. 노동패널의 빈곤탈출률이 낮았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반대로 노동패널의 빈곤진입률은 복지패널에 비해 높았다. 두 자료 사이의 빈곤율 격차가 특히 심했던 2009~10년의 경우 빈곤 진입과 탈출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빈곤경험 유형 비교

여러 해에 걸친 가구의 빈곤경험을 살펴보면 빈곤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에서도 일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다가 탈출한 가구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가구도 있다. 빈곤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일찍 중단되는지는 다년간에 걸친 빈곤지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소절에서는 최근 5개년도의 가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다년간에 걸친 가구별 빈곤지위 변화를 유형화한 후,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패널은 15~19차 자료를 연결하였으며, 이 5개년도에 걸쳐 모두 소득이 관측되고 따라서 빈곤지위가 부여된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빈곤지위는 각 연도별 표본 내에서 부여되었다. 5년도 결합데이터에 포함된 가구는 6,574가구였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복지패널자료(7~11차)를 이용하여서도 연결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관측치는 6,681가구였다.

결합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표본으로 인해 결합데이터의 연도별 빈곤율은 위의 <표 3-2>에서 제시된 연도별 빈곤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복지패널의 경우 연결자료의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는 데 반해 노동패널의 빈곤율은 다소 높아진다. 자료를 연결하기 전후에 빈곤선에 변화가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모두 표본탈락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패널에서는 빈곤선 이하에서, 노동패널에서는 빈곤선 이상에서 표본탈락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3〉 빈곤선 수준별, 자료별 빈곤율 비교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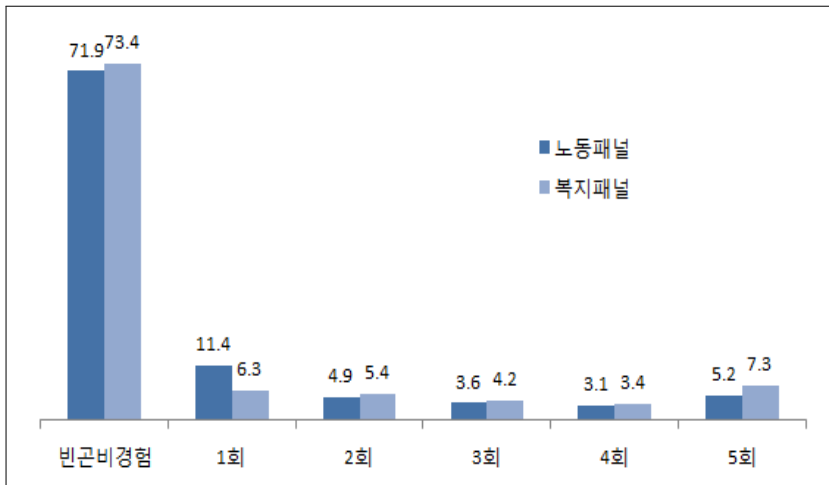
	복지패널		노동패널	
	연결자료 빈곤율	원자료 빈곤율과 격차	연결자료 빈곤율	원자료 빈곤율과 격차
2011	15.5	0.2	13.8	0.7
2012	15.7	-0.2	14.4	0.6
2013	16.7	-0.1	14.0	0.1
2014	15.9	-0.2	14.3	-0.3
2015	15.9	-0.5	13.7	0.2

자료: 한국노동패널 15~19차 가구용 데이터 연결자료  
한국복지패널 7~11차 가구용 데이터 연결자료.

아래의 [그림 3-10]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빈곤경험가구의 빈곤횟수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우선 이 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복지패널이 73.4%로 노동패널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이 기간 중 연도별 빈곤율에서는 복지패널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던

[그림 3-10] 2011~15년간 빈곤경험 및 횟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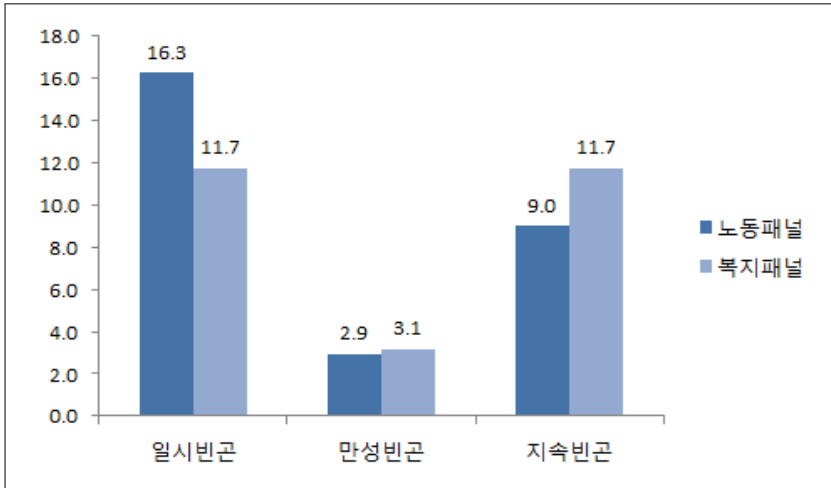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15~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한국복지패널 7~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그림 3-11] 2011~15년간 빈곤경험 유형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 15~19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한국복지패널 7~11차 가구용 데이터,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복지패널의 빈곤층이 빈곤 진입과 탈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0]에서 보듯이 빈곤경험층 가운데 1회 빈곤 경험자의 비율은 노동패널이 복지패널의 거의 2배에 가깝지만, 2회 이상 빈곤 경험자의 비율은 모두 복지패널이 더 높다. 특히 복지패널에서 5년 연속 빈곤층의 비율은 노동패널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앞서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경험 여부에 따라 빈곤비경험자와 빈곤경험자로 구분되고, 빈곤경험자는 다시 일시빈곤, 만성빈곤, 지속빈곤자로 구분된다. 빈곤비경험자는 5년간 빈곤경험이 전무하였던 사람이고, 지속빈곤자는 3년 이상 연속 빈곤을 경험했던 자이다. 만성빈곤은 빈곤경험 연수 면에서는 3년 이상이지만 3년을 연속하여 빈곤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빈곤자와 구분된다.

[그림 3-11]은 이와 같이 구분된 빈곤유형별로 그 비중이 얼마인지를 비교하고 있다. 노동패널의 경우 일시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복지패널의 경우 지속빈곤의 비중이 더 높았다. 노동패널의 빈곤층에 비해 복지패널

의 빈곤층이 더 정제된 집단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제6절 결 론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 9~19차 자료와 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5~15년 사이의 빈곤 관련 지표가 두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빈곤선의 변화 추이나 빈곤율의 변화 추이 면에서는 두 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노동패널의 빈곤선 수준이 복지패널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에는 노동패널의 빈곤지표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 2011년을 기점으로 반대로 복지패널의 빈곤지표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복지패널의 표본추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복지패널의 표본추가 시 저소득층 표본이 집중적으로 보완되면서 이것이 빈곤지표의 변화 추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노인빈곤층 표본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패널의 빈곤층은 복지패널에 비해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패널의 빈곤층은 복지패널의 빈곤층에 비해 빈곤 경험횟수가 적고 지속빈곤이나 만성빈곤층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노동패널에서 노인빈곤율이 낮다는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4 장

## 개인과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빈곤 분석

## 제1절 서론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정책적 대응 방향은 이미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의 소득, 소비, 부채,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가구패널조사이며, 패널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실증적인 삶의 모습을 토대로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분배적 차원에 주목하여, 다양한 고용계약형태가 낳는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변화 및 정책적 함의를 얻는 데 있어서 노동패널의 유용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시작된 가구패널로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소득보장정책과 서비스 정책 등 각종 정책의 설계

와 평가의 기반이 되는 취업상태, 임금과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 관련 정보의 구성과 질문의 방식,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노동패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 제2절 노동시장 불안정성 관련 변수 비교

### 1. 한국복지패널

복지패널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며, 당시 만 15세 이상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한다.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은 가구용 설문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대한 질문과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된 종사상 지위, 근로개월 수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설문지에는 가구원의 지난 1년간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관계(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근로시간형태(시간제, 전일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관계와 근로시간형태에 대한 질문은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만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지는 개인별 응답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근로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근로능력 없는 미취업자), 취업자인 경우 지난해 이직 경험, 근무(사업) 시작일, 지난해 근로개월 수와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에 대해 질문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은 지난해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로 나뉘어 응답하는데,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일한 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한 해 경제활동의 안정성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 해 근로개월 수, 한 달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등으로 항목들을 분해해 놓은 점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단점은 지난해 일한 개월 수나 일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문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 응답하지 않으므로, 지난해 단기간 취업하고 연말 시점에 미취업 상태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지난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 2. 한국노동패널

노동패널은 가구 및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가구패널인 만큼 복지패널보다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는 문항을 포함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은 모두 개인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패널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응답하는 반면 노동패널은 조사 시점의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시간형태(전일제, 시간제)를 응답하도록 한다.

취업 여부와 조사시점에 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나 신규 일자리 지속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응답하며, 일자리를 지속하는 경우 현재 일자리의 시작시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 이를 통해 마지막 일자리의 근속년수를 계산하거나 지난 한 해 일한 개월 수 등을 추산해볼 수 있다. 반면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고 비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마지막 일자리의 시작시기와 끝난 시기가 직업력에 표기되므로 직업력을 활용하면 마지막 일자리의 재직기간과 지난 한 해 일한 개월 수를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한 해의 경제활동(일한 개월 수)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직업력 조사를 이용하거나 현재 일자리의 시작시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지난해 말 기준 미취업자인 경우 개인용 설문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현재 일자리의 경우에도 지난해나 올해 이직한 경우에는 직업력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지난해 일한 개월 수를 얻어낼 수 없다.



노동패널은 정규근로시간 유무에 따라 주단위 근로시간에 응답하도록 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고,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임금근로자는 주 평균 근로시간에 응답한다. 비임금근로자도 주 평균 근로시간을 응답하도록 한다. 복지패널은 일이 규칙적인 경우와 불규칙적인 경우로 분류하므로, 노동패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류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노동패널이 질문 형식상 그리고 시점상 근로시간 정보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반면, 복지패널은 주단위 근로활동으로 보고하기 힘든 불규칙한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주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복지패널과 노동패널 모두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제외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 노인계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것이 우려되므로 근로연령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노동패널 통합표본(12차부터)과 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의 대상시점을 동일하게 2009~15년으로 하였다(복지패널 5~11차, 노동패널 12~18차).

복지패널에서는 가구용 설문에서 모든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비경활)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일용직에 포함되는 자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소득보장이나 공공일자리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복지패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일자리는 전체의 0.3~0.5%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일용직과는 다른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따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과의 비교를 위해 자활 등을 일용직에 포함하여 실업자와

〈표 4-1〉 경제활동상태 분포

주된 경제 활동	상용	임시	일용	자활, 공공, 노인	고용주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활
2009	28.3	13.0	7.1	0.5	2.4	8.8	2.8	1.6	35.7
2010	28.6	14.3	6.9	0.4	2.9	8.2	2.8	1.5	34.6
2011	29.4	14.0	6.5	0.3	2.7	7.7	2.6	1.3	35.4
2012	29.9	15.0	6.3	0.4	2.3	8.0	2.6	1.5	34.1
2013	30.3	13.9	6.4	0.3	2.5	7.7	2.7	1.8	34.4
2014	30.8	13.8	5.7	0.3	2.3	7.5	2.6	1.9	35.0
2015	31.1	15.5	4.8	0.3	2.4	7.2	2.4	1.8	34.7
평균	29.8	14.2	6.2	0.4	2.5	7.8	2.6	1.6	34.8

자료: 복지패널 5~11차.

비경활을 제외한 동일한 종사상 지위 분류를 사용해 비교하기로 한다.

<표 4-2>와 <표 4-3>은 각각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을 이용해 취업자 종사상 지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용직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중이 매우 안정적인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임시직은 증가, 일용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노동패널의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0%포인트, 4%포인트 높고, 복지패널의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노동패널보다 각각 10%포인트, 4%포인트 정도 높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복지패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형태 등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공식 집계자료로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는 복지패널 쪽에 가깝다(2015년 상용직 48.5%, 임시직 19.6% 등). 다만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은 65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를 모수로 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는 노인을 포함한 비중이므로 15~64세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실제 분포는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의 중간쯤일 것으로 추측된다.

복지패널은 지난해 일한 개월 수와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나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에 있어서 연간 근로시간 추계가 가능하다.

〈표 4-2〉 취업자 종사상 지위 분포(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45.0	20.7	12.0	17.8	4.4	100.0
2010	44.7	22.4	11.4	17.2	4.4	100.0
2011	46.5	22.2	10.8	16.5	4.0	100.0
2012	46.4	23.2	10.4	16.0	4.0	100.0
2013	47.6	21.7	10.5	16.0	4.2	100.0
2014	48.9	21.9	9.5	15.6	4.2	100.0
2015	48.9	24.4	8.0	15.0	3.8	100.0
평균	46.9	22.4	10.4	16.3	4.1	100.0

자료: 복지패널 5~11차.

〈표 4-3〉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분포(노동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55.5	9.8	6.6	22.7	5.4	100.0
2010	55.6	10.8	6.4	22.1	5.1	100.0
2011	56.2	11.9	6.2	21.0	4.7	100.0
2012	56.5	12.0	6.4	20.6	4.5	100.0
2013	57.4	11.6	6.2	20.3	4.5	100.0
2014	57.8	11.8	6.2	19.7	4.5	100.0
2015	58.9	11.5	6.2	19.5	3.9	100.0
평균	56.9	11.4	6.3	20.8	4.6	100.0

자료: 노동패널 12~18차.

지난 1년간 일한 개월 수 평균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거의 12개월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0.8개월, 10.5개월가량을 일하고 있어 일하는 개월 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용직 등은 개월 수에 큰 추세가 없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0.4~0.6개월가량 근로기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이 기간 평균 21.7일을 일한 상용직을 기준으

〈표 4-4〉 종사상 지위별 1년간 일한 개월 수(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11.73	10.41	10.13	11.72	11.73	11.26
2010	11.70	10.60	10.38	11.77	11.72	11.32
2011	11.56	10.72	10.59	11.80	11.77	11.32
2012	11.56	10.76	10.40	11.70	11.65	11.28
2013	11.55	10.98	10.55	11.70	11.61	11.35
2014	11.53	10.98	10.57	11.77	11.93	11.37
2015	11.55	11.01	10.53	11.63	11.76	11.36
평균	11.59	10.79	10.45	11.73	11.73	11.32

자료: 복지패널 5~11차.

〈표 4-5〉 종사상 지위별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22.24	21.67	19.02	23.15	23.59	21.96
2010	22.32	22.14	18.53	23.57	23.63	22.12
2011	22.28	21.97	18.56	23.59	24.17	22.10
2012	22.03	21.68	18.25	23.19	23.45	21.80
2013	21.30	21.07	18.23	22.77	22.93	21.23
2014	21.05	21.21	18.38	22.70	23.27	21.19
2015	21.09	21.21	18.01	22.61	23.38	21.19
평균	21.74	21.56	18.45	23.10	23.50	21.66

자료: 복지패널 5~11차.

로 자영자는 좀 더 일하는 반면, 일용직은 평균 3.3일을 적게 일하고, 이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일용직은 짧은 근로개월 수보다는 일한 달의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불안정을 경험하는 반면, 임시직은 일한 달의 근로일수는 상용직에 비해 짧지 않지만 잦은 일자리 변동으로 일한 개월 수가 낮아서 생기는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정보를 활용해 단기간 재직과 잦은 이직, 불규칙한 근로일수나 근

로시간, 짧은 근로시간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을 연간 근로시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을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지난해 일한 총 개월 수)×(주당 평균 근로시간)×4.3으로,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지난해 일한 총 개월 수)×(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일한 날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구해 종사상 지위별 추이로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표 4-6>의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관찰된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고용주·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연간 평균 200시간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한 달 근로일수는 유사하나 잦은 이직으로 근로개월 수가 짧은 임시직은 평균 300시간 적게, 그리고 지난해 근로개월 수도 일한 달 근로일수도 짧은 일용직은 연평균 700시간가량 적게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근로시간은 근로개월 수나 근로일수 등 다양한 일자리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집약하여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노동패널 분석결과,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표 4-7>과 같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길며, 임시직과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 모두 복지패

<표 4-6>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2,382	1,979	1,640	2,580	2,866	2,267
2010	2,378	2,049	1,625	2,589	2,273	2,251
2011	2,337	2,038	1,622	2,554	2,300	2,228
2012	2,317	2,008	1,577	2,509	2,297	2,200
2013	2,257	1,984	1,576	2,456	2,230	2,158
2014	2,224	1,986	1,556	2,428	2,228	2,141
2015	2,228	1,984	1,529	2,393	2,222	2,138
평균	2,300	2,004	1,593	2,504	2,346	2,197

자료: 복지패널 5~11차.

〈표 4-7〉 종사상 지위별 주당 근로시간(노동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48.94	43.34	41.35	53.12	53.13	49.06
2010	49.35	44.22	41.28	52.29	50.25	48.97
2011	48.64	42.77	41.10	51.94	49.18	48.19
2012	47.81	42.78	39.07	51.82	48.72	47.52
2013	47.35	42.04	40.68	50.90	49.39	47.13
2014	47.75	41.71	39.49	51.15	51.43	47.36
2015	46.54	39.75	38.75	50.08	49.13	46.07
평균	48.01	42.30	40.22	51.63	50.23	47.72

자료: 노동패널 12~18차.

널의 연간 근로시간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달(4.3주), 그리고 12개월로 단순히 확장하면 연간 근로시간이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직이 잦고 근로일이 불규칙한 임시 또는 일용직 경제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노동패널은 연간 근로시간을 구하기에 용이하지 않지만, 가정을 통해 복지패널과 같이 연간 근로시간을 추계해보고자 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일한 개월 수)×(주 근로시간)×4.3으로 계산했다. 지난해 일한 개월 수는 일자리 시작시점을 이용해 구하는데, 조사시점 2년 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12개월, 지난해 일을 시작한 경우 지난해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2월까지 개월 수, 올해 일을 시작한 경우 지난해 평균 개월 수만큼 일한 것으로 가정했다. 지난해(t-1) 근로개월 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므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또한 지난해(t-1) 값을 사용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일한 개월 수를 구할 수 있는 2014년이 분석 마지막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복지패널과 비교를 위해 조사시점 비취업자의 마지막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고, 즉 직업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일자리 정보만을 활용했다.

이와 같이 구한 연간 근로시간은 <표 4-8>과 같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4.3×12)을 활용한 만큼은 아니지만 2015년 연간 근로시간 2,113시간

〈표 4-8〉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노동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9	2,401	2,051	2,006	2,696	2,655	2,428
2010	2,398	2,036	2,031	2,592	2,502	2,390
2011	2,362	1,990	1,974	2,576	2,477	2,350
2012	2,340	1,943	1,960	2,551	2,430	2,322
2013	2,304	1,947	2,012	2,541	2,493	2,307
2014	2,366	1,988	2,001	2,585	2,615	2,358
평 균	2,360	1,988	1,997	2,590	2,530	2,357

자료: 노동패널 12~18차.

(OECD 통계)과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이 과대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표 4-6>(복지패널)과 비교했을 때도, 특히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추계되었다. 노동패널에서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일한 개월 수가 과대추계된 이유가 더욱 크다. 노동패널에서는 직업력을 결합하지 않고는 지난해 일한 개월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연간 근로시간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복지패널에서 불규칙하게 일하는 경우와 같이 지난해 근로개월 수와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성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주 평균 일한 날 수라는 질문으로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4절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복지패널과 노동패널 모두 근로소득(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용했다. 근로소득은 1차 소득(primary income)에서 재산소득을 제외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말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소득계층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일을 통해 벌

어들이는 소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얻은 가구의 근로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균등화한 후, 5분위로 나눈 소득계층을 활용했다. 그리고 앞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15~64세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가구주 역시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복지패널은 가구용 설문에서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별 지난해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 전 총급여)을 응답하도록 한다. 즉, 지난해 상용직인 가구원의 세전 연소득, 임시일용직인 각 가구원의 소득, 자영업자 등의 순소득, 그리고 근로활동을 통해 번 기타소득으로 각각 질문한다.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지난해 가구의 근로소득을 구할 수 있다.

노동패널에서는 가구용 설문에서 지난해 가구의 연간 총 근로소득(국민연금·의료보험 포함, 세금 제외) 질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복지패널에서 임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구한 근로소득과 비교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난해 근로개월 수와 마찬가지로 소득은 지난해 연간 총소득인 반면,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는 현재 시점으로 시점을 일치시켰다. 따라서 분석에서 사용된 가장 최근의 정보는 2014년 연간 총소득과 2014년 종사상 지위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다.

종사상 지위별 가구주 소득분포는 <표 4-9>와 같다. 각 종사상 지위별 분위의 분포를 보여준다. 복지패널에 따르면 가구주가 상용직 일자리를 가진 가구의 60%는 4분위 또는 5분위에 속하는 반면, 상용직 중에 1분위인 가구주는 거의 없다. 반면 임시직의 57%는 2분위 또는 3분위, 일용직의 67%는 1, 2분위에 속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동패널의 분포도 이와 유사하지만 상용직 가운데 1, 2분위에 속할 확률이 복지패널에 비해 크고 임시직, 일용직의 분위 분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복지패널과 대비된다.

즉, 노동패널에서는 임시직, 일용직의 1/4, 1/3 정도가 1, 2분위에 각각 속하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임시직 가구주는 2,



〈표 4-9〉 종사상 지위별 가구주 소득분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복지패널					
1분위	2.4	16.5	34.6	19.1	19.9
2분위	14.7	33.3	32.8	19.1	18.7
3분위	23.4	23.7	17.0	20.1	25.1
4분위	27.6	17.9	12.2	19.4	24.3
5분위	31.9	8.6	3.3	22.3	12.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패널					
1분위	8.7	27.3	25.9	14.6	18.5
2분위	17.5	35.2	34.5	20.2	15.2
3분위	22.6	17.2	19.6	20.4	16.3
4분위	24.7	12.1	14.6	21.3	22.0
5분위	26.5	8.2	5.4	23.6	28.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복지패널 5~11차, 노동패널 12~18차.

3분위에, 일용직 가구주는 1, 2분위에 속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는 <표 4-10>의 전체 취업가구주 대비 각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패널은 상용직 비중이 높은 반면, 복지패널은 저소득 계층을 과대표집하면서 일용직 가구주 비중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추이를 보여주지 않고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크게 추세라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지난해 일한 개월 수를 살펴보면 상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의 근로개월수는 유사하며 12개월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가구주는 상용직 가구주보다 근로개월 수가 각각 평균 0.6개월, 1개월씩 짧다. 임금근로자 모든 지위에서 1분위에 속한 가구주의 근로개월 수가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하위 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고용주·자영업자는 전 계층에서 비슷한 근로개월 수를 보여

〈표 4-10〉 전체 취업가구주 대비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복지패널					
1분위	1.2	2.7	3.5	4.4	0.1
2분위	7.4	5.4	3.3	4.4	0.1
3분위	11.8	3.8	1.7	4.6	0.1
4분위	13.9	2.9	1.2	4.5	0.1
5분위	16.0	1.4	0.3	5.1	0.0
노동패널					
1분위	5.0	2.0	2.0	4.0	0.2
2분위	9.9	2.6	2.6	5.5	0.1
3분위	12.9	1.3	1.5	5.6	0.1
4분위	14.1	0.9	1.1	5.8	0.2
5분위	15.1	0.6	0.4	6.4	0.2

자료 : 복지패널 5~11차, 노동패널 12~18차.

〈표 4-11〉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1년간 일한 개월 수(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분위	10.37	10.05	10.42	11.67	10.76	10.80
2분위	11.65	11.30	11.06	11.85	11.91	11.51
3분위	11.85	11.56	11.56	11.87	11.08	11.78
4분위	11.90	11.72	11.44	11.88	11.85	11.85
5분위	11.93	11.52	11.45	11.92	11.99	11.90
전 체	11.83	11.25	10.98	11.84	11.47	11.65

자료 : 복지패널 5~11차.

일할 기회보다는 영세성이 만든 소득격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일한 달 평균일수를 보면 1, 2분위에 속하는 임시직, 특히 일용직 가구주일수록 근로일수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개월 수와 평균 근로일수를 통해 특히 1, 2분위에 속한 가구주가 안정적인 근로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하위 소득계

층에 머물게 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개인의 종사상 지위별 연간 근로시간에서 나타났던 격차는 <표 4-13>과 같이 소득계층별로 나뉘었을 때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임시직, 일용직 가구주 가운데 중상위 분위의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이 분위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임시직의 1분위, 일용직의 1, 2분위에서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는 매우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난해 일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의 격차로 나타나는 일자리 불안정성, 즉 근로기회의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패널에서는 직업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한 해의 근로개월 수를

<표 4-12>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분위	22.39	21.28	17.71	21.65	20.55	20.47
2분위	22.67	21.84	18.40	23.01	23.33	21.84
3분위	22.37	22.48	19.16	23.54	24.56	22.39
4분위	21.78	22.21	19.16	23.73	26.15	22.09
5분위	21.37	21.54	20.42	23.71	23.60	21.89
전 체	21.93	21.94	18.45	23.15	23.81	21.87

자료: 복지패널 5~11차.

<표 4-13>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연간 근로시간(복지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분위	2,086	1,890	1,378	2,019	1,789	1,806
2분위	2,516	2,355	1,818	2,535	2,111	2,364
3분위	2,491	2,414	2,009	2,710	2,453	2,486
4분위	2,392	2,463	2,067	2,739	2,070	2,450
5분위	2,332	2,274	2,166	2,794	2,211	2,429
전 체	2,407	2,305	1,740	2,569	2,135	2,359

자료: 복지패널 5~11차.

〈표 4-14〉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주평균 근로시간(노동패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분위	48.88	44.03	37.19	48.73	45.35	46.30
2분위	51.56	47.97	41.35	55.20	53.85	50.81
3분위	50.42	49.61	43.87	54.60	54.83	51.03
4분위	48.89	44.44	45.66	54.65	48.58	50.06
5분위	48.13	48.14	43.50	52.54	56.72	49.38
전 체	49.50	46.76	41.51	53.39	52.08	49.78

자료: 노동패널 12~18차.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주평균 근로일수는 월평균 근로일수와 같은 불안정성을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 근로시간을 알 수 있을 때는 근로일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연간 근로시간을 구할 근거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근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따로 연간 근로시간을 구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4-14>에서 노동패널로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근로시간을 보이고, 고용주·자영업자도 1분위를 제외하고는 평균 53.4시간에 매우 근접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 또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하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패널의 연간 근로시간과 노동패널의 주 단위 근로시간이 소득계층별·종사상 지위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5분위에 속한 상용직 가구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비교하였다(표 4-15 참조).

노동패널의 주평균 근로시간에서 1분위 일용직 가구주의 근로시간은 5분위 상용직의 77.3%로 매우 낮지만, 복지패널의 연간 근로시간으로 구한 값 59.1%보다는 높다.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1분위에서 모든 종사상 지위의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낮다는 점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표 4-15〉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 근로시간 비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 사자	전 체
연간 근로시간(복지패널)						
1분위	89.5	81.0	59.1	86.6	76.7	77.44
2분위	107.9	101.0	78.0	108.7	90.5	101.37
3분위	106.8	103.5	86.1	116.2	105.2	106.60
4분위	102.6	105.6	88.6	117.5	88.8	105.06
5분위	100.0	97.5	92.9	119.8	94.8	104.16
주당 평균 근로시간(노동패널)						
1분위	101.6	91.5	77.3	101.2	94.2	96.2
2분위	107.1	99.7	85.9	114.7	111.9	105.6
3분위	104.8	103.1	91.1	113.4	113.9	106.0
4분위	101.6	92.3	94.9	113.5	100.9	104.0
5분위	100.0	100.0	90.4	109.2	117.8	102.6

자료: 복지패널 5~11차, 노동패널 12~18차.

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소득계층별·종사상 지위별 유사한 근로시간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재 시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노동패널)과 지난해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간 근로시간(복지패널)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1년간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데 무엇이 더 적절한지 질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더불어 확산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목적과 방향으로 전개 되는 때에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방법은 필요해 보인다.

## 제5절 결론 : 노동패널에 대한 합의

노동패널은 패널조사라는 특징을 살려서 지난 조사 당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8개의 유형(임금근로여부×지난조사시점 계속근로여부×취업상태)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질문한다. 이 연구에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조사문항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일자리 시작시점에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난 한 해의 근로개월 수이며, 8개 유형의 개인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패널은 조사하는 현재 시점의 근로상태에 대해 질문하는데,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 현재 직장이나 사업 시작시점을 질문하므로 이를 통해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와 간접적으로 지난해 근로개월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현재 비취업상태인 경우 마지막 직장이나 사업의 시작 및 종료시점은 직업력에만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지 않으면 현재 비취업자의 최근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취업상태에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 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있고, 복지패널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 유무에 따라 정규과 초과근로시간의 합, 또는 평균 근로시간으로 응답하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주 단위 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 주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반면, 복지패널은 모든 질문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가구용과 가구원용 모두에서 가구원 개인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질문이 있다. 지난해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한 날 근로시간(불규칙적인 일자리) 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규칙적인 일자리)에 대한 설문은 가구원용 개인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15~64세 모든 개인과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 지난해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주 평균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초분

석 결과, 복지패널에서 일의 규칙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답하는 근로개월 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 그리고 이로부터 구한 연간 근로시간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패널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에게 주 평균 근로시간과 주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고 있으나, 중복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가 불규칙한 경우의 근무행태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일자리가 불규칙적인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패널의 문항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근로개월 수 또한 노동패널에서 구할 수는 있으나 직업력을 결합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정보를 얻기 쉽도록 회고적 방식의 질문을 제안한다.

복지패널이 이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갖춘 이유는 조사의 특성상 주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하는 까닭이다. 근로연령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안정되지 못한 일자리를 갖기 쉽고, 일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패널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소홀할 수 없고,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본 건강상태 : 체질량지수를 중심으로

### 제1절 비만과 체질량지수

개인의 건강상태는 개개인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패널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들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으며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나를 다른 자료와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보고된 여러 건강상태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도 비만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본다. 비만은 그 자체로는 증상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비만이 개인의 건강상태 및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비만의 정도 및 분포는 사회 및 국가 또한 의료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이다.

비만은 단순히 개개인의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비만이 증가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만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sup>11)</sup>

물론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만인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비만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정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으로 정의하는데, 진단 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한다.<sup>12)</sup> 서양인은 비만기준이 30 이상이나, 인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3)</sup>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된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타 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 제2절 인체치수조사자료와의 비교

대부분의 설문자료에서 키와 몸무게와 같은 기초신체 자료는 실측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문응답자의 답변에 의해서 구해진다. 실측이 아닌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이기에 응답오차(reporting error)가 존재할 수 있다.<sup>14)</sup> 한국노동패널조사 역시 응답자의 자기보고를 바탕으로 키와 몸무게가 조사되기 때문에 응답오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있는 키와 몸무게, 나아가 체질량

11) Cawley(2004, 2015) 그리고 Han et al.(2009)에 의하면 비만은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임금을 낮추기도 하며 고용확률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

12) 체질량지수를 신체비만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Burkhauser and Cawley(2008)는 비만연구에 있어서 체질량지수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13)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지수를 바탕으로 비만상태를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18.5 미만: 저체중, 18.5~22.9: 정상, 23~24.9: 과체중, 25~29.9: 중도비만, 30 이상: 고도비만.

14) Cawley et al.(2015)은 체중을 3.3% 정도 낮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자가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지수가 실측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얻기 위해, 1979년 1차 측정부터 2015년 7차 측정까지 5~7년 주기로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측정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sup>15)</sup> 이 사업은 인체치수 측정을 통해 한국인이 쓰기에 편리한 제품개발과 생활공간 디자인에 인체표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신체특성이 측정되는데, 본 연구의 관심사인 키와 몸무게도 실측되었다. 실측된 키와 몸무게 자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가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이 보고한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를 준거점으로 삼아 한국노동패널에서 응답자의 답변에 의해 조사된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정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1998년도부터 설문이 시작되었으나, 키와 몸무게에 대한 조사는 오직 제8차(2005년), 제10차(2007년) 그리고 제11차(2008년) 세 번만 이루어졌다. 인체치수조사는 5~7년 주기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노동패널자료가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세 개년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한국노동패널자료와 인체치수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연도는 없다. 제5차 인체치수조사가 2004년에 이루어졌고 제6차 조사가 2010년에 이루어져서 한국노동패널자료와 연도상 가장 근접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5차(2004년) 인체치수조사를 제8차(2005년)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그리고 제6차(2010년) 인체치수조사를 제11차(2008년) 한국노동패널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연구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체치수조사는 조사의 제목이 말하듯 오직 인체치수만 조사된 것이다. 연령, 성별을 제외하고는 인체치수 외의 그 어떤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회경제적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를 비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분포를 연령별, 성별로 비교하여 설문에 의해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실측에 의해 조사된 인체치수조사와 얼마나 근사한가를 알아본다.

15)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zekorea.kr](http://sizekorea.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전체 자료

〈표 5-1〉 기술통계 : 전체 자료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고
연령				
인체5차	23.43	20.43	0	96
인체6차	22.99	15.59	7	69
노동8차	42.72	16.84	15	96
노동10차	43.67	17.27	13	97
노동11차	44.15	17.54	14	98
키(cm)				
인체5차	145.56	27.57	50.5	192.3
인체6차	156.73	15.29	104.7	193.5
노동8차	165.04	8.44	103	198
노동10차	165.06	8.53	100	198
노동11차	165.16	8.34	135	198
몸무게(kg)				
인체5차	47.13	20.80	3.5	126
인체6차	53.57	16.49	16.2	151.1
노동8차	61.47	10.28	30	130
노동10차	61.48	10.19	29	140
노동11차	61.49	10.23	32	130
체질량지수				
인체5차	20.63	4.17	11.16	40.96
인체6차	21.23	3.95	12.33	50.20
노동8차	22.49	2.83	13.33	75.41
노동10차	22.50	2.83	12.86	63.55
노동11차	22.46	2.76	13.84	40.12
비만율(%)				
인체5차	16.21	36.85		
인체6차	17.09	37.65		
노동8차	16.51	37.13		
노동10차	16.48	37.10		
노동11차	15.92	36.58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샘플 수는 인체 5차가 15,560, 인체 6차가 14,016, 노동 8차가 11,053, 노동 10차가 11,643, 노동 11차가 11,656이다.

여기서는 제8차, 제10차, 그리고 제11차 한국노동패널자료와 제5차 그리고 제6차 인체치수조사자료 전체의 기술적 통계치를 성별구별 없이 보고자 한다.

<표 5-1>에서 보듯이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연령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이 키 및 몸무게 차이의 근원으로 보인다. 조사의 목적상 인체치수조사는 유아동을 상당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양 조사 전체를 가지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있는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신체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다음 절에서는 두 자료가 공히 지지하는 연령대로 샘플을 제약한 후 비교하고자 한다.

## 2. 공통된 연령으로 제약된 자료

앞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두 자료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공통된 연령대로 샘플을 제약한 후 두 자료에 나타난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신체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개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므로, 제5차 인체치수조사(2004년)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2005년)을 대비하고, 제6차 인체치수조사(2010년)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2008년)을 대비하고자 한다.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분석의 경우, 두 자료가 15세에서 96세까지 공히 조사를 했으므로 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체지표를 살펴본다. 한편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4세에서 69세까지만 공통되게 조사되었으므로 이들 연령층으로 샘플을 제약하고 분석하였다.

<표 5-2>는 제5차 인체치수조사(2004년)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2005년)에 공통적으로 조사된 연령층(15~96세)만을 대상으로 신체지표를 대비한 결과를 성별로 보이고 있다. 또한 <표 5-3>에는 제6차 인체치수조사(2010년)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2008년)에 공통적으로 조사된 연령층(만 14~69세)으로 샘플을 제한하여 신체지표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표 5-2〉 기술통계 :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36.03	36.14	31.92
키(cm)	163.22	169.58	157.02
몸무게(kg)	61.59	67.66	55.69
체질량지수	23.07	23.51	22.64
비만율(%)	27.08	31.75	22.54
샘플수	8,640	4,262	4,378
노동8차			
연령	42.72	42.15	43.27
키(cm)	165.04	171.46	158.88
몸무게(kg)	61.47	67.95	55.27
체질량지수	22.49	23.09	21.92
비만율(%)	16.51	20.19	12.99
샘플수	11,053	5,363	5,690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3〉 기술통계 :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29.68	28.57	30.99
키(cm)	164.82	170.39	158.32
몸무게(kg)	61.72	67.50	54.97
체질량지수	22.63	23.20	21.96
비만율(%)	23.14	29.19	16.08
샘플수	9,140	4,923	4,217
노동11차			
연령	40.82	40.73	40.92
키(cm)	165.74	171.95	159.55
몸무게(kg)	61.93	68.44	55.45
체질량지수	22.47	23.13	21.81
비만율(%)	15.83	20.00	11.68
샘플수	10,508	5,206	5,302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두 개의 표에서 보듯이, 시기적으로 근접한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에 동시에 조사된 연령대로 제약을 했지만, 키, 몸무게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체질량지수나 비만율은 두 개의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평균연령인데, 이는 연령대는 같더라도 두 개의 조사가 상당히 다른 연령분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령분포는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 등의 신체지표의 통계가 양 자료에서 다른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연령분포가 ‘적절히’ 통제만 된다면 양 자료는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지수 등의 신체지표통계가 매우 근사해질 것인가?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령별 성별 비교

연령을 십단위로 나누고 동일한 연령대별로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두 개의 자료는 상이한 연령분포를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의 한계가 있어,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어느 정도 응답오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헤아리기가 어렵다.

연령분포를 십단위로 나누어 동일한 연령대를 상대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의 신체지표 통계치는 <표 5-4>부터 <표 5-9>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표에는 제6차 인체치수조사(2010년)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2008년)을 비교한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차 인체치수조사(2004년)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2005년)을 연령별/성별로 통제하여 비교한 결과는 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연령분포가 크게 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제6차 인체치수조사에는 10대가 43%나 되고 있으나 제11차 한국노동패널에서는 10대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제11차 한국노동패널에서는 40대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십대로 나누어진 연령대 내에서는 평균연령이 인체치수조사나 한국노동패널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연령별로 보면 각 십대 단위 내에서는 엇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듯하다. 이와 같이 연령별/성별로 나누어진 집단 내에서 신체지표통계는 두 개의 자료에서 별

〈표 5-4〉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14~1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16.50	16.34	16.69
키(cm)	165.35	170.01	159.63
몸무게(kg)	58.57	62.91	53.26
체질량지수	21.32	21.69	20.88
비만율(%)	12.24	15.78	7.90
샘플비중(%)	43.16	44.14	42.02
노동11차			
연령	16.94	16.98	16.90
키(cm)	167.79	173.30	161.49
몸무게(kg)	58.81	64.16	52.68
체질량지수	20.79	21.32	20.20
비만율(%)	5.58	7.18	3.74
샘플비중(%)	10.18	10.90	9.47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5〉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20~2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24.54	24.74	24.26
키(cm)	168.01	173.58	160.32
몸무게(kg)	63.50	70.91	53.28
체질량지수	22.34	23.51	20.71
비만율(%)	17.26	26.69	4.26
샘플비중(%)	15.91	17.12	14.49
노동11차			
연령	25.06	25.32	24.84
키(cm)	168.02	175.23	161.91
몸무게(kg)	60.45	69.02	53.18
체질량지수	21.29	22.47	20.28
비만율(%)	7.71	11.89	4.16
샘플비중(%)	16.62	15.30	17.94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6〉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30~3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34.63	34.62	34.63
키(cm)	166.63	172.14	159.52
몸무게(kg)	65.86	73.56	55.92
체질량지수	23.57	24.81	21.97
비만율(%)	30.99	44.22	13.91
샘플비중(%)	17.30	18.10	16.36
노동11차			
연령	34.62	34.45	34.80
키(cm)	167.28	173.26	160.82
몸무게(kg)	63.31	71.24	54.74
체질량지수	22.49	23.70	21.17
비만율(%)	17.39	26.84	6.99
샘플비중(%)	19.16	19.96	18.36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7〉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40~4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43.94	43.89	44.01
키(cm)	163.43	169.18	156.75
몸무게(kg)	64.74	71.21	57.22
체질량지수	24.12	24.85	23.27
비만율(%)	36.71	48.05	23.53
샘플비중(%)	8.85	8.84	8.87
노동11차			
연령	44.65	44.61	44.68
키(cm)	165.15	171.49	158.89
몸무게(kg)	62.54	69.23	55.93
체질량지수	22.83	23.51	22.16
비만율(%)	16.61	23.73	9.56
샘플비중(%)	23.16	23.09	23.24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8〉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50~5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54.35	54.46	54.27
키(cm)	160.08	166.34	154.68
몸무게(kg)	63.44	68.58	58.99
체질량지수	24.71	24.77	24.66
비만율(%)	42.33	45.03	40.00
샘플비중(%)	7.13	6.13	8.30
노동11차			
연령	54.15	54.04	54.26
키(cm)	163.87	169.86	157.86
몸무게(kg)	62.61	67.72	57.48
체질량지수	23.28	23.45	23.08
비만율(%)	20.74	21.43	20.05
샘플비중(%)	18.65	18.72	18.59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표 5-9〉 제6차 인체치수조사와 제11차 한국노동패널 비교(60~69세)

	전 체	남	여
인체6차			
연령	64.16	64.12	64.18
키(cm)	157.13	164.40	152.30
몸무게(kg)	61.28	66.55	57.78
체질량지수	24.75	24.60	27.91
비만율(%)	45.49	46.59	44.76
샘플비중(%)	7.65	5.67	9.96
노동11차			
연령	64.32	64.09	64.53
키(cm)	162.46	168.54	156.58
몸무게(kg)	62.16	66.51	57.95
체질량지수	23.52	23.40	23.65
비만율(%)	24.17	21.21	27.02
샘플비중(%)	12.22	12.04	12.04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차이가 없게 되었는가? 그러면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응답오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응답오차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히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 한국노동패널의 응답자의 신체지표에 대한 답변을 인체치수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대체로 키는 좀 더 크게 나오고 몸무게는 적게 나온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에서 계산된 체질량지수는 인체치수조사에서 계산된 체질량지수보다 적게 나온다.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비만율로 많은 경우 한국노동패널의 비만율은 인체치수조사의 비만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기도 한다. 물론 이는 한국에서의 비만이 체질량지수값 25를 경계로 하여 일어나는 착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한국노동패널 응답자의 답변에는 어느 정도 응답오차가 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 제3절 맺음말

본 연구는 키, 몸무게 등 한국노동패널에 있는 신체지표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비만과 관련된 체질량지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구축할 때 어느 정도 응답오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얻기 위해 행하는 인체치수조사가 실측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인체치수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응답오차가 있나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인체치수자료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있지만, 비만율로 따지면 상당히 낮다.

물론 동일한 해에 조사된 두 개의 자료도 아니니 쉽게 한국노동패널의 응답오차가 크다 적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가장 확실하게 응답오차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응답자의 신체지표 관련 답변을 얻은 후 실측을 통해 그 괴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나아가 응답자 전원의 신체지표를 실측

한다면 응답오차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실측은 비용 및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응답오차의 편향성이 맞는지는 좀 더 연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한국노동패널에 보고된 신체지표가 어느 정도의 응답오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부표 5-1〉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15~1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16.96	17.01	16.91
키(cm)	165.55	171.67	159.72
몸무게(kg)	59.38	65.21	53.84
체질량지수	21.58	22.09	21.09
비만율(%)	12.91	18.12	7.95
샘플비중(%)	31.83	31.46	32.18
노동8차			
연령	16.92	16.90	16.96
키(cm)	167.78	173.13	161.28
몸무게(kg)	59.72	65.53	52.68
체질량지수	21.10	21.80	20.25
비만율(%)	7.56	11.15	3.21
샘플비중(%)	8.46	9.47	7.48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2〉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20~2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24.31	24.29	24.33
키(cm)	166.53	173.17	160.01
몸무게(kg)	61.89	69.80	54.12
체질량지수	22.19	23.26	21.13
비만율(%)	15.96	23.38	8.67
샘플비중(%)	15.88	15.95	15.81
노동8차			
연령	24.92	25.27	24.63
키(cm)	167.61	174.44	161.85
몸무게(kg)	60.27	68.87	53.01
체질량지수	21.34	22.65	20.22
비만율(%)	8.51	14.41	3.53
샘플비중(%)	16.98	15.89	18.02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3〉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30~3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34.55	34.57	34.52
키(cm)	164.21	170.99	157.66
몸무게(kg)	63.90	71.91	56.15
체질량지수	23.57	24.58	22.59
비만율(%)	30.29	42.76	18.23
샘플비중(%)	16.74	16.68	16.79
노동8차			
연령	34.58	34.59	34.58
키(cm)	166.88	173.17	160.27
몸무게(kg)	62.72	70.31	54.75
체질량지수	22.39	23.42	21.32
비만율(%)	15.75	23.89	7.19
샘플비중(%)	19.97	20.92	19.07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4〉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40~4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43.91	43.74	44.08
키(cm)	162.33	168.64	156.10
몸무게(kg)	63.95	70.56	57.42
체질량지수	24.17	24.80	23.55
비만율(%)	35.78	47.17	24.51
샘플비중(%)	9.48	9.55	9.41
노동8차			
연령	44.42	44.50	44.34
키(cm)	164.88	171.25	158.69
몸무게(kg)	62.49	68.82	56.32
체질량지수	22.90	23.44	22.36
비만율(%)	17.40	23.28	11.67
샘플비중(%)	21.47	21.66	21.28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5〉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50~5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54.42	54.38	54.47
키(cm)	160.26	166.09	154.29
몸무게(kg)	64.74	69.13	60.24
체질량지수	25.17	25.04	25.31
비만율(%)	50.20	50.26	50.13
샘플비중(%)	8.74	8.96	8.52
노동8차			
연령	54.14	54.11	54.18
키(cm)	163.49	169.44	157.36
몸무게(kg)	62.91	67.57	58.12
체질량지수	23.50	23.51	23.48
비만율(%)	24.20	23.27	25.17
샘플비중(%)	15.42	15.99	14.87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6〉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60~69세)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64.26	64.37	64.16
키(cm)	158.18	164.37	151.76
몸무게(kg)	62.23	65.89	58.45
체질량지수	24.85	24.36	25.36
비만율(%)	47.58	39.75	55.70
샘플비중(%)	9.10	9.39	8.82
노동8차			
연령	64.43	64.31	64.53
키(cm)	161.84	168.30	156.09
몸무게(kg)	61.31	65.67	57.43
체질량지수	23.38	23.16	23.57
비만율(%)	23.93	20.57	26.92
샘플비중(%)	10.36	9.98	10.73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부표 5-7〉 제5차 인체치수조사와 제8차 한국노동패널 비교(70세 이상)

	전 체	남	여
인체5차			
연령	75.52	75.70	75.36
키(cm)	155.49	162.44	149.11
몸무게(kg)	58.14	61.13	55.38
체질량지수	24.02	23.11	24.86
비만율(%)	39.60	30.50	47.98
샘플비중(%)	8.24	8.00	8.47
노동8차			
연령	76.15	75.39	76.67
키(cm)	159.13	166.49	154.11
몸무게(kg)	57.06	62.80	53.16
체질량지수	22.47	22.64	22.36
비만율(%)	18.20	17.00	19.03
샘플비중(%)	7.35	6.09	8.55

주 : ‘인체’와 ‘노동’은 각각 인체치수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강신옥(2015),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 홍민기 외, 『노동패널자료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표』, 고용노동부.
-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4(2), pp.1~21.
- \_\_\_\_\_(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pp.37~70.
- 배규식(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가을호(통권 제95호), pp.128~162.
- 배규식 · 조성재 · 홍민기 · 김기민 · 전인 · 이영호 · 권현지 · 진숙경 · 이문범(2011),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오세웅(2015),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33편, pp.271~303.
- 이재욱(2014), 「시간외근로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포럼』 12, pp.37~72.
- 이준구(1994),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2판, 다산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2017),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한국노동패널 1~1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Burkhauser R. V. and J. Cawley(2008), "Beyond BMI: The Value of More Accurate Measures of Fatness and Obesity in Social



- Science Researc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2), pp.519~529.
- Cawley, J.(2004), “The Impact of Obesity on Wag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9(2), pp.451~474.
- \_\_\_\_\_(2015), “An Economy of Scales: a Selective Review of Obesity’s Economic Causes, Consequences, and Soluti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43, pp.244~268.
- Cawley, J., J. C. Maclean, M. Hammer, and N. Wintfeld(2015), “Reporting error in weight and its implications for bias in economic models,” *Economics & Human Biology* 19, pp.27~44.
- Han, E., E. C. Norton, and S. C. Stearns(2009), “Weight versus Wages: Fat versus Lean Paychecks,” *Health Economics* 18(5), pp.535~548.



◆ 執筆陣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형재(고려대 교수)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윤명수(인하대학교 교수)

노동패널자료 연구(Ⅲ)

- |           |   |
|-----------|---|
|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6일 인쇄<br>2017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승택 원장직무대행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ISBN 979-11-260-0190-3      정가 5,000원